

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(주요정책부문)

2015. 4.

국토교통부

2014년도
자체평가
결과보고서
(주요정책부문)

2015. 4.

국토교통부

목 차

I . 평가개요	1
II . 평가결과	4
III .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	17
1. 전략목표 I (30개 과제)	17
2. 전략목표 II (29개 과제)	47
3. 전략목표 III (47 과제)	76
4. 전략목표 IV (29개 과제)	123
5. 전략목표 V (38개 과제)	152
6. 전략목표 VI (28개 과제)	190

1. 평가개요

(1) 중점 평가방향

□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

-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

* 성과지표의 달성도 및 추진일정의 충실성 등 정량적 지표에 대해 기초실과 감사관실의 중복검증 실시('15.1월)하여 평가기초자료에 반영

- 국토, 주택, 교통, 항공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(7개)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를 평가하는 등 평가의 타당성 제고

- 국토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*에 따라 평가 실시

* 국토부 특성지표 개발 및 기존지표 배점조정, 지표평가 사전실시 등

-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서 최종평가('15.1월) 이전에 난이도('14.5월)와 상반기 노력도 평가('14.7월)를 분리 실시

- 매 평가마다 개별항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여,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담당부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

- 주요과제에 대한 소위별 현장점검을 실시(15회)하여 성과확인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평가에 반영

□ 평가의 변별력 제고

-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의 난이도 항목에 대해서는 평정 등급을 5등급으로 강제배분하여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

- 장관관 평가를 거쳐 특별히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가점 부여(상반기 1점, 하반기 2점)

(2) 평가추진 개요

□ 평가추진 체계

-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(총리실) 및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(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32명)
 - 국토, 주택, 건설·수자원, 교통, 도로·철도, 항공 등 전문 분야별로 7개의 소위원회(소위별 3~5명 위원 구성)를 구성·운영
 - 소위원장들로 구성된 CEO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, CEO과제를 소위와 별도로 통합평가하고 소위별 이의신청을 최종 조정

평가 실적 보고서 작성	⇒	소위원회 평가	⇒	CEO평가위	⇒	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
7개 분야별 추진실적 작성		CEO평가위 및 7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평가 실시		소위별 이의신청 검토		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최종 확정
201개 과제별 담당부서		소관부서 지원, 기획담당관실 총괄		기획조정실		기획조정실

□ 평가방법

-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
 - 난이도 평가(14.5) → 상반기 노력도 평가(14.7) → 최종평가(15.1)
- 매 평가마다 CEO평가위에서 먼저 CEO과제를 평가(28개)한 후 각 소위별로 실국장, 과장과제를 평가
- 소위별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CEO평가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
- 자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○ 평가대상 : 총 201개 과제, 341개 지표

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(측정기준)	배점(100)	평가시기
과제난이도	○ 성과지표의 난이도	·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·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·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(법 제정 등)	30	'14.5
과제이행노력도	○ 계획이행의 충실성	·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	20	'14.7 '15.1
	○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· 정책집행과정 모니터링 여부 · 여건· 상황변화에 대응정도 ·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	15	
과제목표달성도	○ 성과지표의 달성도	·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	20	'15.1
	○ 정책효과 발생정도	·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·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	15	

<가감점 지표>

평가항목	가감점 항목
가점	<p>정책우수 과제 (최대 +3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관님의 반기별 주요업무 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가점부여(최대 3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반기 우수과제시(1점), 하반기 우수과제시(2점) - 여러과제로 그룹핑된 과제는 개별과제의 비중대로 가점배분
감점	<p>국정과제, 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(최대 -2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계획에 반영 되지 아니한 경우 → 해당과의 관련 과제에 감점(-2점) ○ 시행계획에는 반영했으나, 당초 보고된 내용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치한 경우 → 해당과제에 감점(-1점)

2. 평가결과

(1) 총 평

- 성과평가 체계의 개편을 통해 과제 작성대상 부서를 확대하고 업무보고에 주요내용이 없는 부서(공통부서)는 자체과제를 발굴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부처의 주요정책 관리 내실화

구 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
관련 부서 수(BSC 단위부서)	본부 108개	본부 83개	본부 133개
과제 개수	160개	165개	201개
지표 개수	204개	230개	341개
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	87.2% (26개 지표 미달성)	91.3% (20개 지표 미달성)	97.0% (47개 지표 미달성)
평균 점수(과제)	75.67	72.32	87.63
최대값-최소값(과제)	36.25	31.58	18.18
표준편차	6.83	5.28	3.63

- '14년 총 133개 단위부서의 20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 - 매우우수 과제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,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, 행복주택 공급추진,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,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, 규제총점관리제 등으로 평가됨
 - 부진 과제는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 및 책임중계시스템 구축, 도로굴착 최소화 등으로 평가됨

□ 총 201개의 관리과제의 34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7%로

○ 29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(다만, 부분달성은 달성률은 0% 이상으로 산정*)

* 법령 개정이 목표인 경우에 국회제출시 달성률을 90%로 산정

□ 금년도 개편된 성과평가 체계의 핵심은 난이도 중심의 평가체계 운영이었고, 난이도를 통한 과제간 편차가 충분히 발생(2.32)했고,

○ 소위별 평가의 관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(노력도, 달성도)는 소위별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산정

* 과제 추진중에 특별히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장차관 평가를 거쳐 반기별로 가점을 부여하여 과제 추진의 동기부여(상반기 1점, 하반기 2점)

** 현장점검을 통한 평가위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



현장점검(수자원분야)



현장점검(도로분야)



현장점검 (항공분야)



현장점검 (항공분야)

(2) 주요성과

- 행복주택 공급 추진,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,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등 40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,
- 행복주택 공급 추진 과제는 약 3.6만호 입지를 확정하고 이 중 2.6만호를 사업승인하여 행복주택 본격 추진의 기반 마련
-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과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개정(12.9)으로 '15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예상
-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과제는 선도지역 지역('14.5, 13곳)과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
- 수서발 KTX경쟁도입 및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 과제는 공공기관 투자자로 주주를 구성, 공영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핵심성과 우수
-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과제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(9.1)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'06년 이후 최고치(100.5만건)를 기록(전년대비 18% 증가)
- 주택기금을 「주택도시기금」으로 개편 과제는 주택도시기금법 연내 개정(12.9)으로 도시재생분야 지원확대의 기반 마련
- 규제총점관리제 과제는 규제품질까지 고려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('14.6)하고, 국토부 규제점수를 16,311점(20.3%) 감축
 - 규제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우선 개선(9,460점 감축, 전체 감축점수의 58%)
- 대중교통 활성화 과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(One Card-All Pass) 시스템을 본격 시행('14.6)하는 등 핵심성과 우수
- 민자사업 재구조화 과제는 서수원-평택 민자도로의 사업구조를 개편('14.10)하여 통행료 부담*을 줄이고, MRG를 최초로 폐지하여 재정부담도 완화

* 통행료 17% 인하, 이용자부담 연간 382억원 경감 예상

-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과제는 사업 구조조정, 자산매각,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(23개)의 부채를 22.8조원 감축
-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과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소 선정,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('14.12) 등 핵심성과 우수
- 국민불편 지자체 임의건축지침 규제 개선 과제는 지자체 숨은규제 전수조사로 확인된 지자체 임의기준(1,178건) 중 696건은 연내 폐지 하고 나머지(482건)도 '15년 상반기에 정비하기로 협의 완료
- 해외건설수주확대 및 수익성 제고 과제는 유가하락 등 여건악화 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 보증규모 확대(2→4천억원),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신설('14.2)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액 660억불 달성

(3) 개선·보완 사항

- 종전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문제기관 착공 추진,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39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,
- 종전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문제기관 착공 추진 과제는 국토 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미착공, 교육과정평가원 설계 미착공 등으로 주요일정이 지연되어, 대응성 차원에서 보완 필요
-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및 책임증계시스템 구축 과제는 시스템 구축 예산 미확보로 계획대비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사업계획 변경하는 등 보완 필요
-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과제는 부여지구 실시계획 수립 지연, 부산 에코델타시티 착공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계획대비 지연되어, '15년에는 일정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
- 도로굴착 최소화 과제는 중기굴착계획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개정(도로법 시행령, '14.7)되어 굴착공사시행자의 중기굴착계획 수립 확인이 어려워졌으므로, 향후 제도개선 등 보완 필요

(4) 관리과제 목록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전략목표 1. 지역균형발전,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한다		
◆ 성과목표 1.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.		
1-1-①	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	CEO
1-1-②	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제도 개편	과장
◆ 성과목표 2. 도시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.		
1-2-①	생태하천조성 및 홍수대비 하천 정비	실국장
1-2-②	경인아라뱃길 활성화	실국장
1-2-③	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	실국장
1-2-④	생활인프라 평가	과장
1-2-⑤	철도 폐선부지 활용	과장
1-2-⑥	용산공원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확립	과장
◆ 성과목표 3. 아름답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만든다.		
1-3-①	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만들기	CEO
1-3-②	공공건축물의 설계수준 향상	실국장
1-3-③	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진흥	실국장
1-3-④	국토경관 개선	과장
◆ 성과목표 4.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.		
1-4-①	공공기관 이전 차질 없이 추진	CEO
1-4-②	수요 맞춤형 공항인프라 확충	CEO
1-4-③	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	실국장
1-4-④	지방중추도시권 육성	실국장
1-4-⑤	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	실국장
1-4-⑥	동서통합지대 조성 및 휴양관광벨트 구축	실국장
1-4-⑦	지방공항 항행인프라 확충	실국장
1-4-⑧	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	과장
1-4-⑨	지역주도형 지역개발사업체계로 전환	과장
1-4-⑩	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및 새만금사업 활성화방안 구축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I-4-⑪	제주국제자유도시 및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활성화 지원	과장
I-4-⑫	중전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문제기관 착공 추진	과장
I-4-⑬	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점검 강화	과장
◆ 성과목표 5. 미래를 대비한 국토전략을 마련한다.		
I-5-①	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	실국장
I-5-②	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	실국장
I-5-③	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	과장
I-5-④	유라시아 철도연결 추진	과장
I-5-⑤	남북철도 연결망 구축	과장
전략목표 II.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.		
◆ 성과목표 1.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.		
II-1-①	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	CEO
II-1-②	하우스푸어 주택매입	실국장
II-1-③	재건축·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	실국장
II-1-④	주택기금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및 민간 주택건설 금융지원 강화	과장
II-1-⑤	환경변화를 감안한 토지규제 합리화	과장
II-1-⑥	LH 부채감축을 위한 사업비 절감 및 제도개선 추진	과장
II-1-⑦	차질없는 신도시 개발 추진	과장
◆ 성과목표 2.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.		
II-2-①	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강화	CEO
II-2-②	공공임대리츠 추진체계구축 및 활성화	실국장
II-2-③	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	실국장
II-2-④	공공건설 임대주택 착·준공 관리	실국장
II-2-⑤	광명시흥지구 사업 정리방안 마련	실국장
II-2-⑥	주택임대관리업 육성	과장
II-2-⑦	민간자본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II-2-⑧	공공주택 장기 미착공 해소 방안 마련	과장
II-2-⑨	임대주택 건설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유치	과장
II-2-⑩	GB 공공주택사업의 차질없는 추진	과장
II-2-⑪	전환지구 등 공공주택사업의 차질없는 추진	과장
◆ 성과목표 3. 지자체, 주민과 함께 행복주택을 건설한다.		
II-3-①	행복주택 공급추진	CEO
II-3-②	성공적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	CEO
II-3-③	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	실국장
II-3-④	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제도 개선 및 운영	과장
II-3-⑤	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	과장
◆ 성과목표 4.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주거급여체계를 개편한다.		
II-4-①	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	과장
◆ 성과목표 5. 서민주택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개편한다.		
II-5-①	주택기금을 「주택도시기금」으로 개편	CEO
◆ 성과목표 6.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킨다.		
II-6-①	아파트 생활분쟁 줄이기	실국장
◆ 성과목표 7.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든다.		
II-7-①	노후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	과장
II-7-②	살기좋은 주택 만들기	과장
II-7-③	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	과장
전략목표 III.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.		
◆ 성과목표 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한다.		
III-1-①	규제총점관리제	CEO
III-1-②	산업단지 경쟁력 강화	CEO
III-1-③	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	CEO
III-1-④	도시·군계획시설 융복합 활성화 및 용도전환 허용	실국장
III-1-⑤	GB 해제지역 정비 촉진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III-1-⑥	국가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산단 정주환경 개선	과장
III-1-⑦	토지개발 One-Stop 인허가 도입	과장
III-1-⑧	국민불편 지자체 임의건축지침 규제 개선	과장
III-1-⑨	개발부담금제도 개선	과장
◆ 성과목표 2.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.		
III-2-①	국적항공사와 공항의 경쟁력 강화	CEO
III-2-②	전략적 항공네트워크 확대 및 ICAO내 위상 강화	실국장
III-2-③	항공레저를 국민 레저산업으로 육성	실국장
III-2-④	첨단항공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	실국장
III-2-⑤	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	실국장
◆ 성과목표 3. 공간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.		
III-3-①	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	CEO
III-3-②	국토교통 빅데이터 본격 활용	실국장
III-3-③	공간정보 청년 취·창업 지원	실국장
III-3-④	정부 3.0 시대의 U-City 발전전략 마련	과장
III-3-⑤	SOC 사업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	과장
III-3-⑥	공간정보 SW 품질인증 체계 구축	과장
III-3-⑦	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	과장
III-3-⑧	디지털지적(地籍)구축확대	과장
◆ 성과목표 4. 해외에서 건설산업 성장 모멘텀을 발굴한다.		
III-4-①	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수익성 제고	CEO
III-4-②	해외 발주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수주환경 조성	실국장
III-4-③	해외 新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/사업 다변화	과장
III-4-④	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준비	과장
◆ 성과목표 5. 일류 육상운송사업을 육성한다.		
III-5-①	물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	CEO
III-5-②	수서發 KTX 경쟁도입 및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	CEO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III-5-③	택시산업 발전대책 추진	실국장
III-5-④	공동물류 확대 및 제3자물류 지원	실국장
III-5-⑤	택배분야 육성 발전	실국장
III-5-⑥	물류단지 및 복합터미널 활성화	과장
III-5-⑦	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기반 마련	과장
III-5-⑧	자동차 연관산업 고도화	과장
III-5-⑨	온라인 물류직거래 장터 시범구축	과장
◆ 성과목표 6.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.		
III-6-①	리츠시장 규제 완화	CEO
III-6-②	감정평가 서비스 수준 제고	실국장
III-6-③	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및 책임중개시스템 구축	과장
III-6-④	부동산 조사평가업무 품질 제고	과장
◆ 성과목표 7.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눈다.		
III-7-①	미래산업 일자리 늘리기	실국장
III-7-②	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기	과장
III-7-③	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	과장
III-7-④	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	과장
III-7-⑤	건설기술자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	과장
III-7-⑥	마을버스 여성일자리 나누기	과장
III-7-⑦	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	과장
III-7-⑧	차세대 항공리더 육성 지원	과장
전략목표 IV.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		
◆ 성과목표 1. 물에 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		
IV-1-①	낙동강 맑은 물 공급	CEO
IV-1-②	소통과 합의를 통한 댐 계획 수립	실국장
IV-1-③	상습 홍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추진	실국장
IV-1-④	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마련	과장
IV-1-⑤	효율적인 수자원 물관리 추진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IV-1-⑥	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하천관리 체계 마련	과장
IV-1-⑦	녹조 등 수질문제 대응능력 강화	과장
◆ 성과목표 2.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.		
IV-2-①	안전한 건설환경 조성	CEO
IV-2-②	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(Disaster Free City) 만들기	과장
◆ 성과목표 3.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.		
IV-3-①	항공제도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도 유지	CEO
IV-3-②	국적항공사 사고예방활동 강화	CEO
IV-3-③	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시범구축	실국장
IV-3-④	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	실국장
IV-3-⑤	하늘길(공역) 확대추진	실국장
IV-3-⑥	항공장애표시등 관리 강화	실국장
IV-3-⑦	도로통행 안전·편의성 향상	실국장
IV-3-⑧	철도안전은 정부가 직접 관리	실국장
IV-3-⑨	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(ATFM) 구축추진	과장
IV-3-⑩	항행업무 안전관리 강화로 항공안전 확보	과장
IV-3-⑪	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	과장
IV-3-⑫	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고도화	과장
IV-3-⑬	소형항공기 차세대 감시시스템 구축	과장
IV-3-⑭	고령자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 개편	과장
IV-3-⑮	민자고속도로 견인서비스 활성화	과장
IV-3-⑯	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시행	과장
IV-3-⑰	도로 안전성 향상	과장
IV-3-⑱	도로굴착 최소화	과장
IV-3-⑲	고속도로 2차사고 줄이기	과장
IV-3-⑳	철도안전 인프라 강화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전략목표 V.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한다.		
◆ 성과목표 1. 교통혼잡을 완화한다.		
V-1-①	대중교통 활성화	CEO
V-1-②	광역급행버스 발전방안 마련	실국장
V-1-③	감응식 신호체계 도입	실국장
V-1-④	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혼잡도로 개선	실국장
V-1-⑤	고속도로망 확충	과장
V-1-⑥	교통혼잡지도 작성 및 혼잡예보	과장
V-1-⑦	교통수요관리 강화	과장
V-1-⑧	회전교차로 우선 적용	과장
V-1-⑨	첨단 ITS 기술을 통한 도로혼잡·안전 제고	과장
◆ 성과목표 2.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한다.		
V-2-①	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	실국장
V-2-②	국가 간선철도망 확충 추진	실국장
V-2-③	대도시권 철도 확충	실국장
V-2-④	인천공항에서도 KTX 서비스 이용 가능	과장
◆ 성과목표 3. 교통 SOC 투자를 효율화한다.		
V-3-①	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	실국장
V-3-②	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	과장
V-3-③	시공단계 경제성검토 의무화	과장
V-3-④	국가교통DB 신뢰도 제고	과장
V-3-⑤	SOC사업 중간점검 및 총사업비 효율적 관리	과장
◆ 성과목표 4. 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.		
V-4-①	자동차 매매·정비사업 투명성 제고	CEO
V-4-②	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강화	CEO
V-4-③	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	실국장
V-4-④	화물차주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화물운송시장 안정 도모	과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V-4-⑤	대포차의 획기적인 감소대책 추진	과장
V-4-⑥	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	과장
◆ 성과목표 5.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혀 나간다.		
V-5-①	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	CEO
V-5-②	항공보안 역량 강화를 통한 승객서비스 개선	실국장
V-5-③	다변화된 도로이용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향상	실국장
V-5-④	지역주민 항공서비스 제고	과장
V-5-⑤	항공교통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	과장
V-5-⑥	교통물류체계의 평가 및 에코드라이브 활성화	과장
V-5-⑦	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정보제공 및 기능 확대	과장
V-5-⑧	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	과장
V-5-⑨	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	과장
V-5-⑩	인천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	과장
V-5-⑪	휴대용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자유로운 사용 허용	과장
V-5-⑫	재정-민자 고속도로 요금소 통합	과장
V-5-⑬	철도 환승체계 개선	과장
V-5-⑭	교육 테마열차 개발	과장
전략목표 VI.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.		
◆ 성과목표 1.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한다.		
VI-1-①	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	CEO
VI-1-②	LH공사를 부채감축 선도기관으로 관리	실국장
VI-1-③	수공 재무개선대책 마련	실국장
VI-1-④	도로공사 경영정상화	실국장
VI-1-⑤	철도공사 경영을 정상화	실국장
VI-1-⑥	철도시설공단 경영을 정상화	과장
◆ 성과목표 2. 국토교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.		
VI-2-①	비정상적 관행 개선 등을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	CEO
VI-2-②	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력 관리 강화	실국장

관리 과제명		과제 분류
VI-2-③	건설ENG 제도 선진화	실국장
VI-2-④	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	실국장
VI-2-⑤	중소ENG 업체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	과장
VI-2-⑥	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설시장 환경 조성	과장
VI-2-⑦	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	과장
VI-2-⑧	표준계약서 작성 유도	과장
◆ 성과목표 3. 국토교통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.		
VI-3-①	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	과장
VI-3-②	화물운송시장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질서 확립	과장
VI-3-③	공항 특정인력 직접고용 검토	과장
◆ 성과목표 4. 국민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.		
VI-4-①	능동적인 홍보시스템 구축	실국장
VI-4-②	국민중심형 온라인 기획홍보 활성화	과장
VI-4-③	국토교통 민원만족도 제고	과장
VI-4-④	청렴하고 깨끗한 국토교통부 구현	과장
VI-4-⑤	국토교통 행정정보화	과장
◆ 성과목표 5.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을 높여 나간다.		
VI-4-①	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	과장
VI-4-②	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핵심성과 제고	과장
VI-4-③	선제적, 전략적 갈등관리 체계구축	과장
VI-4-④	적정 예산확보와 집행관리로 정책성과 제고	과장
VI-4-⑤	국제협력 강화 및 통상이익 극대화	과장
VI-4-⑥	비상안전 대비역량 강화	과장

3.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

【전략목표 I】 지역균형발전,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한다.

◆ 성과목표 1.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.

1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선도지역 사업)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(4월)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(11월) 및 사업 착수(12월) 지원
- (주민·지자체 역량 강화)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('14년, 20개소) 하고, 지역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

□ 핵심성과

- 선도지역 지자체 공모 시행('14.1~3) 결과, 총 86개 지역이 신청 (경쟁률 6.6:1)하는 등 지역의 뜨거운 관심과 수요 집중
- 선도지역 12곳에 대해 도시재생특위(총리) 의결을 거쳐 활성화계획 수립(1차 '14.11.11, 2차 12.12) 및 사업착수(1차 '14.11.12, 2차 12.15)
 - '17년까지 12,030억원의 투자(재정+민간)를 확정하고, 부처 협업 사업으로 19개부처 48개사업에 대해 4,041억원 지원 확정
- 마을기업·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('14.12.26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도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계획수립 항목, 지표 산정 기준 등을 차등화
- 생활권 계획 개념을 도입하고, 생활권별(대·중·소) 비전·전략 및 생활인프라(문화·복지·교육 등) 확충계획 제시
-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중 도시·군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 사항(도시 진단, 도시재생 필요구역 등)은 기본계획에 선반영

□ 핵심성과

- (관리계획 지침 개정) 도시관리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5년 이내 변경금지 제한 규정 완화 추진
- (기본계획 지침 개정) 인구 저성장 및 도시 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방식을 변경
- (협업체계 구축) 효율적 업무추진과 가시적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기술사, 연구원, 업계 대표, 지자체 전문가, 업계 등도 포함 구축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인구 과다 산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

◆ 성과목표 2. 도시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.

1

생태하천조성 및 홍수대비 하천 정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('11.11)에 따라 이수, 치수, 생태, 환경, 문화, 친수,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
- 하천정비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도 병행

□ 핵심성과

- 하천정비사업 착공(46건) 및 준공(110건), 국토부-환경부간 공동지침 마련 등 '14년 추진계획을 모두 달성
 - (사업추진) 상반기 사업 착공 46건(생태하천조성 12, 홍수예방 34, '14.6), 하반기 사업 준공 110건(생태하천조성 32, 홍수예방 78, '14.12) 완료
 - (지방하천사업 공동지침 제정) 우리부와 환경부 사업간 유사·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서 체결(양 부처 차관) 및 공동지침 마련('14.2.17)
 - (사례집 발간) 바람직한 하천 정비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이해도모를 위해 「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」을 발간·홍보('14.3.3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과제 지연 사항은 없으나, 하천사업 및 조직에 대한 지방이양 필요성 제기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경인아라뱃길*은 '12.5월 개통 이후, 경기 침체, 개항초기 활성화 여건 미조성, 신생항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
- 이에, 항 여건, 부진원인 분석 등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
 - 또한, 정부 정책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·해수부·수공이 함께하는 아라뱃길 활성화 협의회 지속적 운영
 - 여객·유람 노선 다변화를 위한 준설 등 한강~서해섬 운항 확대

□ 핵심성과

- 전문가 연구용역 시행('14.3~12)을 통한 아라뱃길 활성화 전략 마련
- 아라뱃길 활성화협의회를 2회('14.5.30, 9.30) 개최하여 신규항로 개설, 여객·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해수부와 협의
- 한강~서해 중대형 유람선이 운행토록 한강항로 준설 예산을 확보 ('13.12, 4억원)하고, 준설을 완료('14.7월)하여 노선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한강~서해섬간 운항 확대의 선행 조건인 여의도 선착장 사용에 대하여 서울시의 미협조로 여객선 운항 확대 미완료(1217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원, 녹지, 하천변, 도로변 등을 포함한 녹색인프라 확충·활용을 위한 ‘국가 녹색 인프라 정책 기본방향’ 마련
- 중복투자 예방 및 다양한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폐철도·하천변 녹지화, 도시숲(산림청), 생태놀이터(환경부), 도시농업공원(농림부) 등을 포괄한 대표적 협업 과제로 추진
- 도시재생 및 GB사업을 활용하여 생활공원 60개소 조성
-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채납 비율(현재 70~80%) 완화, 수익사업 조기 실현 등 규제 완화 추진

□ 핵심성과

- ‘국가 녹색인프라 정책 기본방향’ 마련(‘14.9.30)
 - 주요내용 : ① 거점공원 조성 ② 공원취약지역 해소 ③ 안전한 도시구현 등
- 녹색인프라 협업을 위한 관계 부처간 MOU 체결(‘14.10.29)
 - *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,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, 환경부 자연정책과
- 도시재생 및 GB사업을 활용하여 생활공원 71개소 조성
 - GB내 주민지원사업(45개소) 및 도시재생사업(26개소) 선정·지원(‘14.12)
-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 상정(‘14.3.12, VIP보고) 및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
 - 민간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 발의(‘14.6.23) 및 지침 개정(‘14.6.30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국가 차원의 지자체 일괄 평가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계획(도시계획 등)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, 지자체 맞춤형 진단 평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 제시(지자체 간 수준비교) 필요

□ 핵심성과

-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·시행(14.1)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
 - 효율적인 토지이용, 지역 경제 활성화, 문화·경관의 활용,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(총 30개 지표)에 걸쳐 평가
 -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, 지자체의 현 주소(절대적·상대적 위치)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
- 지자체 맞춤형 진단보고서(정책 컨설팅)를 통해 부문별로 지자체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요소를 알려주고, 유사한 도시 규모를 가진 지자체와 절대적 서비스 수준 차이를 분석, 보완 방안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지자체의 자료제출 부담완화를 위한 자료 제출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철도 폐선 ·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활용대상 부지에 대한 검토 및 제도개선 등 활용방안 마련
 - (부지검토) 폐선부지 · 유희부지, 지하노선상부 등 활용가능한 부지-현황 분석과 이를 개발 ·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
 - (제도개선) 철도부지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법상 제약여건 분석과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 제시
- 개별적인 철도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활용구상, 지역내 의견수렴, 활용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
□ 핵심성과

- 폐선부지 등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,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 **활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**
- 전국의 미활용 폐선부지(11.4백만㎡)를 대상으로 부지의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유형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폐선 및 유희부지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재부 소관의 국유재산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, 국유재산 관리의 틀 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부처 협의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미군 평택이전 일정('16년 완료)에 맞추어 용산공원을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사전 준비 필요
- 또한 공원조성의 전제가 되는 미군 이전을 위한 평택기지 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변 산재부지 복합시설 조성*을 차질 없이 진행

* 국방부-LH 간 기부 對 양여 협약에 따라 LH는 평택기지 일부를 건설 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산재부지를 LH에 양여하여 기지 건설비용(3.4조원) 보전

□ 핵심성과

- '11.10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이후,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산공원 조성 방향을 재정립하는 변경계획 심의·고시
 - 기존 테마를 가진 6개 단위 공원(생태·문화유산·세계문화·관문·생산·놀이공원)에서 경계 없이 조화되는 단일 생태공원으로 전환
- 평택기지 조성과 연계된 복합시설조성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*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
-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상시 협의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한미연합사 잔류결정에 따른 공원 조성지연 등 언론 우려 불식 필요

◆ 성과목표 3. 아름답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만든다.

1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만들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
 -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을 통해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공개 의무화 근거 마련
 -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
 -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계최초의 KS 규격 제정 및 인증제 시범운영,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등

□ 핵심성과
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(5.28)을 통해 에너지 기준 강화 및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- 에너지성능이 낮은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「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」을 마련(‘14.12)
- 여름철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반영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 개정 완료(‘14.12)
-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(3.13,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) 및 BEMS 활성화 방안 보고(1.8, 녹색위)
-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이자 지원사업(‘14.12 사업비 500억원)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* 실시

* 시공지원사업(4개소, 13억원), 사업기획 지원사업(7개소, 7억원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등 품격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촉진 제도 도입 및 운영
 - 2.3억원 이상의 설계발주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, 발주제도 개선,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지원 정책과 시스템 구축

□ 핵심성과

- (공모방식 의무화) 설계비 2.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시 디자인, 아이디어를 집중 평가하는 공모방식 우선적용 제도 마련
 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* 제정·시행(6.5)
- (발주제도 개선)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지침,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·시행
- (지원센터 설치) 발주청은 전문성과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사업기획에 대해 사전검토·자문하여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지원
- (관계부처 협의) 경제관계장관회의, 국가건축위원회 안전 보고*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건축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협의
 - *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(1.29), 계약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(12.17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일부 추진일정이 지연(건축계약제도 개선방안 안전상정, 9월→12월) 되어, 향후에는 일정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고유한 건축문화의 계승·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
- 한옥 등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·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자체의 '공공시설 한옥건축물' 건립지원 확대
- 한옥의 산업화·대중화 등의 토대마련을 위한 한옥 설계 및 시공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

□ 핵심성과

- (건축정책기본계획) 고유한 건축문화의 계승·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
 - 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TF팀 운영 및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범 정부차원의 중장기 건축정책 수립
- (법적기반)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완료 (6.3)하고, 시행령·규칙 등 하위법령(안) 마련(12월)
- (한옥 건축물 확산) 공공시설 한옥건축물 단기지원 사업 5곳 선정·지원(1월) 및 중장기지원 사업 4곳 선정 완료(6월)
- (인력양성) 한옥 설계, 시공 및 캠프 등 총 7곳의 교육기관*을 통해 263명 교육 시행 완료(12월)

* 설계(4곳, 185명), 시공(2곳, 53명), 캠프(1곳, 25명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국토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협정을 활성화하고, 지역별 디자인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

* 경관협정 시범사업 3건,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4건

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행령 제정 및 실태조사 시범실시

□ 핵심성과

- (경관협정)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협정 확산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3개소**를 선정하여 경관협정안을 마련(12.末)
- (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)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(2.14), 최종마스터플랜 성과평가 실시(12.8)
- 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)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(시행령·규칙)을 제정(5.23)하였으며, 공사중단 건축물 시범 실태조사 실시(7~12월)
 -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사중단 건축 현장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제정·배포(6.25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

◆ 성과목표 4.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.

1 공공기관 이전 차질없이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'05년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 소재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을 추진중

* 151개 공공기관 → 10개 혁신도시 115개, 세종시 17개, 개별이전 19개
(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인원은 총 3만7천명 → 도시당 3~6천명)

-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151개 이전 기관 중 연내 60개 기관 이전 완료 추진

□ 핵심성과

- '14년 이전 예정인 60개 기관에 대한 이전 정상 추진중

-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11월말 기준 38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, 12월말까지 22개 기관 추가 이전 예정

* '14년 세부계획(총 60개) : 상반기(19개), 3분기(9개), 4분기(32개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신공항) 최근 영남/제주지역의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영남/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검토
- (인천공항) 인천공항 항공수요가 '17년경 現 시설 처리능력(4,400만명/연)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, 적기 대처를 위해 3단계 확장사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신공항) 영남/제주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완료(영남 8.22, 제주 9.12), “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” 착수(제주 12.4)
 - ☞ 특히, 지역에서는 지역인사 참여, 국외전문가 활용 등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요조사 연구결과를 도출한 점을 긍정적 평가
 - 「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」 착수(‘14.12.4~’15.11.28)
- (인천공항 3단계) 3단계 확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
 - 12월말 현재 3단계 종합공정을 18.5%(계획 16.5% 대비 112%) 달성
 - 특히, 신규 항공수요 창출, 공항 수익구조 다변화, 공항 지원기능 강화, 이용객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도 성공적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대학·연구소·종합병원 건립비지원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등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마련
- 혁신도시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, 정부 산학협력사업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, 소규모 기업입주를 위한 클러스터 부지 소필지화 등 추진

□ 핵심성과

- 혁신도시내 「산학연 유치지원센터」 운영 및 건립비를 지원하여 혁신도시 투자유치 및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지원
- 「정부 합동 T/F」 구성·운영(4.30)하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「산·학·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」(2회) 개최하는 등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,
 - 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(9.25)·시행
-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2개소(대구, 충북) 도시첨단산단 지정(12.1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혁신도시내 대학·연구소·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의 건립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(혁신법 개정, '14.5)가 마련됨에 따라,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지원예산 확대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지자체가 공동으로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

□ 핵심성과

- 전국 대도시 및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중추기능을 담당할 지방 중추도시권 총 20개* 구성 확정('14.3.12. 제5차 무투회의, VIP 보고)

* 광역·특별자치시 6개,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및 도청소재지 14개 등

- 중추도시권 '15년 지원 대상사업 확정(7.29)* 및 지역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(9.16)

* 20개 중추도시권에 62건 사업 1,816억원 지원 결정

- 지역 주도로 시·도별 발전계획(생활권 포함)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의결(12.2), 세부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등 추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지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제도개선) 기업도시 애로사항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기업도시 공원녹지율 조정을 위한 「기업도시 계획기준」 개정·고시
 - 기업도시 최소개발규모(산업교역형 500만㎡, 지식기반형 330만㎡, 관광레저형 660만㎡) 조정안 마련 등
- (사업추진) 원주기업도시 1단계 산업용지 준공 추진, 영암·해남 기업도시 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, 태안기업도시 골프장 오픈

□ 핵심성과

- (제도개선) 공원녹지율 완화 등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('14.9),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안 마련('14.12 국토정책위원회 발표), 공유수면 매립특례 도입('14.12 법률개정안 국회제출), 기업도시 입주 기업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('14.12 조특법 개정) 등으로 사업 활성화
 - 영암해남 기업도시가 착공('14.6)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, 충주 및 원주기업도시 분양률 제고 및 21개사 입주완료 등 기업입주 활발
- (사업추진) 원주기업도시 공정률 56%, 영암·해남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('14.6), 태안기업도시 골프장 개장('14.6, 2개소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동서통합지대)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 화합과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서통합지대를 조성
- (휴양관광벨트) 해안권 선도사업 및 내륙권역별 발전종합계획 추진
 - 해안권은 11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, 내륙권은 3개 권역별 발전종합 계획 수립 및 권역지정을 위한 「동서남해안특별법 시행령」 개정

□ 핵심성과

- (동서통합지대) 세부추진계획 수립('14.6), 동서통합대교 건설 최적안 마련('14.11) 및 고흥우주랜드 개발계획 승인·개발구역 지정('14.7)
- (휴양관광벨트) 해안권 선도사업 추진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
 - 11개 해안권 선도사업*을 추진하고, 내륙권 3개 권역 발전종합계획 수립('14.6.23) 및 이를 위한 「동서남해안특별법 시행령」 개정('14.5)

* 해안권 선도사업 : 개발계획 승인(3건), 실시계획 승인(3건), 착공(5건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동서통합교량건설방안 마련, 해안권발전 시행 공사 시행(2건)이 지연되었으므로, 향후에는 과제 일정관리를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위성항법(GPS) 감시경보시스템 운영개시 및 지방공항 시설개량 사업 지속 추진
- (공항 결항률개선) 김포·김해·제주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도모
- (중요 항공교통시스템 사이버 대응 강화) 사이버 테러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
- (現 항공교통센터 현대화 및 제2 ATC 구축) 항공교통수요 분산 수용 및 비상 시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하늘길 구현

□ 핵심성과

- 지방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추진 방안 연구용역 실시('14.4~10)
- 항행안전시설 장애 등 3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전면개정('14.7) 및 위기대응훈련 실시('14.10)
-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('14.9)
- 제주공항 비상용 레이더(SSR) 구축 운영개시('14.1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간행물 발행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체계적·계획적 추진으로 지역 사회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
 - (부산에코델타시티) 사업 신뢰성 제고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,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
 - (구리월드디자인시티) 환경부·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후, 친수 구역으로 지정('14.12월)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지역으로 육성

□ 핵심성과

- (부산 에코델타시티) 타당성 검증을 통한 사업의 신뢰성 제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친수위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완료(9.5)
 - 공사 발주를 완료(10.22)하고,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
- (대전 갑천, 나주 노안, 부여 규암 등) 친수구역 지정 고시(1.23) 완료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구리 친수사업의 경우 GB 해제와 관련한 중도위 심의가 계속 지연되어 중도위 심의완료 되는대로 친수구역지정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지역개발사업제도 통합) 기존의 개발촉진지구,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, 지역주도로 지역개발사업 추진
- (지역개발사업 평가)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 시행
- (성장촉진지역 재지정)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매 5년마다 선정

□ 핵심성과

- (지역개발사업 통합) 지역개발사업 통합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·공포('14.6.3)됨에 따라 시행('15.1.1)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
 - * 하위법령안 입법예고(7~8월), 규제심사(10월), 법제처 심사(12월), 국무회의(12월)
- 지자체·민간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'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 관련 지역별 간담회' 등 개최
 - * 시·군 과장급 간담회(11월중 권역별 4회),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(12.19)
-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개발지원법에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실무 가이드 라인 및 관련 업무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('14.11~'15.1)
- (지역개발사업 평가) 총 181건의 개발계획·단위사업에 대해 사전·집행평가 완료(7.28)
- (성장촉진지역 재지정) 관계부처 협의, 시도의견 수렴 및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(9.25, 70개 시·군)

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및 새만금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세종시)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지정 추진,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구축
- (새만금) 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('13.9월)으로 사업추진 기반 형성이후,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지원방안 마련

□ 핵심성과

- (세종시) 행복도시 주택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방안 마련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행복도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자족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
- (새만금) 새만금사업 투자 인센티브를 최소 경자구역 수준으로 확대* 및 외투기업 사업시행자 인정범위 확대** 등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* 법률 개정안 방침('14.7.21), 관계부처 협의('14.8~10), 규제심사 등 추진 중

** 시행령 개정·공포('14.11.4)

- 또한 한·중 정상회담(7.3) 등을 통해 새만금 한·중 경제협력단지 개발에 합의하는 등 투자유치 발판 마련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제주국제자유도시)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항공우주박물관 개관,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및 면세점 관련 법률개정 추진 등
- (반월특수지역) 특수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공급 제도 개선 법안 발의 및 시화MTV내 간선도로 추진방안 마련

□ 핵심성과

- (제주국제자유도시) JDC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('14.3)·달성, 제주국제학교 잉여금배당 허용 추진방안 확정('14.8), 항공우주박물관 개관(4.24) 및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* 등 제도개선 완료
* \$400 → \$600(조특법 개정, '14.12)
- (반월특수지역) 「관계기관 T/F」를 운영하여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현안 해소를 위한 산업법 개정안 마련(4.16) 및 법안 국회 발의(6.25),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소위 위원실 법안 설명 및 협조 요청('14.8~'14.11),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회부('14.1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제주국제자유도시) 야당, 전교조 등에서 '교육의 돈벌이화', '공교육 붕괴'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*하는 상황으로 지속 협의 필요
- (반월특수지역) 세월호 침몰, 누리예산 편성 등 문제로 국회가 장기 표류되어 산업법 개정안(6.25 발의)에 대한 법안심사*가 이루어지지 못함.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청사신축 재원 마련을 위한 중전부동산 매각 및 청사 착공 대책 마련
 -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장기 미 매각된 6개 기관 중전부동산 매각대책 마련

□ 핵심성과

- 중전부동산 매각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위 보고
 - 회의 결과에 따라 용도규제 완화 추진, 차입이자 전액지원 및 수도권 잔류 임차기관 공동매입 등 기관별 매각 방안 추진
- 국토연구원 ·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개 중전부동산 매각 달성
 -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청사 착공이 지연된 국토연구원(11.26)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(11.7 · 12.10) 중전부동산 매각 완료
- 청사 신축비 차입이자 보전 신청서 접수 및 지원
 - '14년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에 이차보전(2%) 지원 중이며, 특히 국토연구원 · 에너지관리공단은 '15년부터 이자전액 국고 지원 계획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토연구원, 에너지관리공단 등 이전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충분한 사업기간 반영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추진배경) '14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에 따라 이전직원들의 주거·교육시설 등의 정주여건과 필수 생활서비스 적기 공급 필요
- (주요내용) 정주여건 적기 공급과 이전초기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주여건 추진상황 점검과 생활서비스 공공시설 신설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정부-4개 상급 노조간 노·정실무협의회를 개최('14.7.4, '14.8.4 총 2회) 하고 정주여건 현장점검(3회) 등 입주점검반 활동 실시
- 지방이전 본격화에 따라 「정부여건 정부합동 T/F」의 참여부처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 점검 실효성 강화('14.12)
- 이전기관 직원 및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예산 확보
 - 주민센터 4곳(전남, 강원, 충북, 경남), 소방서(울산), 파출소(울산), 우체국(전북), 보건지소 2곳(충북, 광주전남)을 적기 공급하고, 공공 직장어린이집 3곳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혁신도시 내에 주민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(인구기준 미달 등)이 있어, 국회, 기재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건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필요

◆ 성과목표 5. 미래를 대비한 국토전략을 마련한다.

1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전망·진단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국토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(국토부 업무보고, '14.2.19)
-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비전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고, 시급도·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핵심과제를 도출
 - 지역, 도시, SOC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* 국토연구원에서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 (2014.5~2015.3)

□ 핵심성과

- 주요 메가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전망('14.6.30)
- 내·외부 전문가 미래국토포럼 등 구성·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(7월~)
- 미래국토발전 전략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소통채널 구축('14.8월~)
-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: 총리주재 국토정책위원회 심의·결정(1217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성과 등에 대한 홍보 노력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철도를 주 노선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송효율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포함한 한반도 중심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
 - 통일대비 한반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, 대륙진출을 위한 북중·북러 접경지역 교통망 연계방안, 다자간 산업협력방안
 - 유럽 등 주요 목적지까지의 국제운송로 비교, 국제협력방안 도출 및 향후 중점 추진사업 도출 등

□ 핵심성과

-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계부처 회의 : '14.1.24
- 공동연구기관 간담회 : '14.3.27
-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TF 구성 : '14.5.21
- 한-러 고위급 교통협력위원회 개최 : '14.7.20 ~ 7.23
- ASEM 정상회의 의제 채택 및 국제협력 방안 발표 : '14.10.1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련 연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성 강화 등을 통한 과잉·난개발 방지
-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토관리 기능 강화
- * 국토-환경계획의 연계 근거 마련 및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“국토기본법” 및 “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” 개정

□ 핵심성과

-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용역착수(‘14.5.16)
-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19회) 및 국토계획수립권자 자문, 지원
 - 지속가능 전문가 회의(8회), 평가제도 전문가 회의(8회),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회의(3회), 국토계획평가 및 지원(13건)
-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평가 지침 개정(12.23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을 위한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유라시아 철도관련 조사, 연구 등을 통해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방안을 마련('14.12)

* SRX는 물류·교통·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방안의 하나로 TKR과 유라시아 철도를 기본축으로 도로, 항공, 해상이 결합된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

- 중국, 러시아 등과 TCR, TSR 연계를 위한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하고, 유라시아 철도운임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가입 협의

□ 핵심성과

-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4.5~11) 및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철도(TCR, TSR 등) 연계방안* 마련('14.12)

* 북한철도 현대화·고속화, 화물 수송 경쟁력 확보, 대륙철도 연결 노선(안) 등

- 중국('14.1), 러시아('14.7) 등과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철도 (TKR)와 유라시아 철도(TSR,TCR) 연결 등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
-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정회원 가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 ('14.4), OSJD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정회원 가입 협의('14.6.12, 바르샤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지속 추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연결(동해선, 서해선 등) 철도망을 조기구축하고 해상수송 화물의 육로전환을 통하여 운송시간 단축, 운임절감, 통과 지역의 경제발전 도모
- 남북 연계 철도건설(포항-삼척, 동두천-연천, 서해선)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송 기반구축 및 유라시아(TSR, TCR) 철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및 유럽 연결 교통망 다변화 노선 구축

□ 핵심성과

- 남북철도 남한내 단절구간인 동해선, 서해선 연결과 더불어 남북 관계개선에 대비, 북한철도와 연계되는 통일대비 철도망 구축 적기 추진
- (포항-삼척) 영덕-삼척구간의 보완설계 완료,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협의완료(14.12)
- (동두천-연천)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,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,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(14.12)
- (서해선)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, 내년도 예산 확보(400억) 후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완료(14.1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

【전략목표Ⅱ】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.

◆ **성과목표 1.**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.

1 **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**

(1) 평가결과

□ **과제 주요내용**

-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중 대표적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개정 추진
- 지방과 수도권의 **형평성 제고**와 민간부문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,
⇒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**전매행위 제한**(1년 → 6개월) **완화** 추진 (주택법 시행령 개정)

□ **핵심성과**

- 주택거래량 100.5만건을 기록하는 등 당초 목표(89.4만건) 초과달성
-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시장 자율기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**정상화 기반 마련**
 - '09년 이래 5년간의 논의 끝에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**분양가상한제 개정 합의**('14.12.29 국회 본회의 통과)
 -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, 도정법 개정 등 핵심법안도 개정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'13년 국정과제로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 임대주택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하우스푸어 주거 안정 강화 추진
- 희망임대주택리츠를 통해 '14년에는 면적제한(85m²이하)을 폐지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주택 매입 검토

□ 핵심성과

- '14년 희망임대리츠 사업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월 부담액 70만원 경감
 - (매입전) 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평균 월 134만원 부담
 - (매입후) 주택임대료로 평균 월 평균 64만원 부담
- 하우스푸어 주택 172호를 매입하고 주택관련 대출 345억원 상환
 - * 희망임대리츠는 하우스푸어지원이 목적인 사업으로, 사업참여자 저조는 부동산 시장 기능이 회복세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양호한 현상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정책 수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재건축 규제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도록 정상화
 -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
 - 시장과열기('06년)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도모
 -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 제고
 -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(조합)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(국·공유지)의 범위 확대

□ 핵심성과

- 「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
-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를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
- 무상양도대상 확대,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
-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개선을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및 관련 고시 개정완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 구입자금 지원 확대
- (전세금안심대출)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보호되고, 목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는 '전세금 안심대출' 시행('14.1월)
 - * 목돈안드는전세II 방식과 전세금반환보증(대주보)을 연계한 전세대출 제도
- (보증부 표준PF대출) 대주보가 보증한 PF 사업장에 대해 금리 인하, 공사비 우선 집행, 하도급대금 직불 등 「표준대출구조」 마련('14.5월)
 - 공모를 거쳐 책임성있게 추진할 주간사를 선정(우리은행, 농협)하고, 시중 최저금리(3% 후반)의 주택 PF자금 지원

□ 핵심성과

- (주택구입 지원) 주택의 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공유형모기지 제도 안착에 성공
 - 금년말까지 약 10만 가구의 내집마련 꿈 실현 지원 전망으로 금년 거래량(약 100만 가구)의 10%를 주택기금이 저리지원한 셈
- (전세금 안심대출) 수도권미분양 아파트 위주로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목돈부담도 더는 제도로 각광
- (표준 PF대출) 중견/중소업체 등의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(7~8%→ 3%대 후반) 주택사업 금융의 새로운 질서 확립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변화되는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
- (실거래신고) 실거래 검증 강화방안을 마련하고('14.3),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제정('14.8) 및 정부합동점검·정밀조사 실시(분기)

□ 핵심성과

-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(2.6, 11.10)

* 우리부 허가구역 332km²를 해제, 현재 149km² 국토면적의 0.15% 존치

- 해제지역에 대한 지가동향 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
-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,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*, 인기지역의 분양권 전매 해제 등에 따라 실거래검증 강화대책** 마련(3.13)
-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 평가시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매출손실액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·공포 완료(10.2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('06.1)된 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, 여전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남아있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사업비 절감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, LH 경영정상화 및 부채감축을 획기적으로 개선
 - (제도개선)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,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 LH 부담완화 및 지구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

□ 핵심성과

《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》

- 철저한 수용검증 등을 바탕으로 위례, 동탄2 등 3개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 재검토를 통해 LH 부채해소, 사업추진 정상화 도모

《제도개선》

- 택지구제 완화를 통한 LH 부채 해소, 공공택지시장 활성화 및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('14.5)
- 지지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요구 예방, 근거가 부족한 생태 통로 설치 기준 명확화 등 신도시계획기준 개정('14.1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민원 등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 개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전월세난 해소,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차질 없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택지·주택 공급역량 확보 필요
 - 주택공급 2.1만호(입주기준) 등 계획된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 추진
-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초기 입주민의 불편해소 방안 강구
 - 최초 주민입주를 앞둔 동탄(2), 양주(옥정) 신도시에 대해 입주지원 점검반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초기 입주민 불편 해소

□ 핵심성과

- 주택공급 2.1만호(입주기준) 달성 등 차질 없는 공급 추진
- 입주지원점검반 구성·운영(양주, 동탄2), 학교 적기 개교(위례) 등 초기 입주민 불편 해소
- 준공단계 신도시의 단계별 사업 준공(양주옥정, 김포한강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일부 신도시의 상업용지 내 권장용도 의무비율 규정 등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

◆ 성과목표 2.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.

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9만호 공급하고(준공기준), 이 중에서 서도 도심지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·전세방식 비중 확대

* 건설 5만, 매입임대 1.3만, 전세임대 2.7만(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포함)

□ 핵심성과

○ (공급) 공공임대주택

- (건설임대주택) '14년도 공공건설임대주택 5만호 공급계획대비 113% 공급('14.11월 기준, 공공 4.0만호, 민간 1.7만호)

- (매입·전세임대) '14년도 기존주택 매입·전세임대 4만호 공급계획 대비 82% 공급('14.11월 기준, 매입 1.0만호, 전세 2.5만호)

* 대학생 전세임대 3000호 대비 3,410호 공급(108.2%)

○ (공급) 민간임대주택

-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확대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「임대주택법」 등 공포(5.28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(7.16)

○ (정보)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

- 공공임대주택 입주정보 포털 구축을 통해 전국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효율화, 임대주택정보 대국민 제공(11.5, 서비스개시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주택기금·LH가 설립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를 건설·임대
- (자금구조) 리츠 출자는 주택기금·LH 등 공공부문 위주로, 용자는 주택기금 및 민간자금을 통해 조달

□ 핵심성과

(1) 추진기반 구축

- 주택기금의 리츠 출자근거 마련(주택법 개정 5.21)
-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편성(4,000억 8.8)

(2) 공공임대 리츠 설립 및 기금 출자 집행

- NHF 1·2호 영업인가(8.11), 민자조달(8.21) 및 기금출자(8.29)
- NHF 3호 영업인가(11.17), 민자조달(11.17) 및 기금출자(11.25)

< 공공임대리츠 1~3호 개요 >

구분	지구	세대수(호)	총사업비(억원)
NHF 1호	하남미사, 화성동탄2, 김포한강, 평택소사벌	4,448	15,310 (기금 1,228)
NHF 2호	시흥목감, 오산세교 광주선운	2,698	6,945 (기금 557)
NHF 3호	화성동탄2(2개), 파주운정, 안성아양, 대구테크노	7,141	15,100 (기금 1,208)
계		12,146	37,355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및 수급 불균형 등 고려하여,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
 - 공공의 약화된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민간 참여방식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, 금년 사업승인 물량을 차질없이 관리
 - * '14년 5.6만호 사업승인,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정부지원단가 3% 상향, 행복주택 건축기준 등 특례마련,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 추진

□ 핵심성과

- '14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·발표('14.4.1)
 - 공공건설임대 공급실적(목표: 사업승인 5.6만호) 추진현황 점검(매월)
- 행복주택 건축기준 등 특례규정 마련('14.4.29, 시행령 개정)
 - (주요내용) 건폐율·용적률, 녹지·공원, 주차장 등 기준 완화 적용
- '1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안 확정('14.12.2, 본회의의결)
 - '14년 대비 정부지원단가 3%상향('14년 659 →'15년 679만원/3.3㎡)
-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('14.12월, 국회 통과)
 - (주요내용) 공공임대리츠를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에 포함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및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
- '14년 준공 목표는 전년도 공급보다 증가한 5만호로 설정
 - ※ ('13년 계획) 3.7만호 → ('13년 실적) 4.2만호 → ('14년 계획) 5.0만호
- '14년 착공 물량은 향후 준공 목표, 기착공 물량 등을 감안하여 7.0만호 공급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임대시장 수급 불균형 및 전세가격 상승 등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
- 시장 수요,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년 임대주택 공급(착·준공) 목표를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
 - * '14년 준공 실적은 5.0만호 목표 대비 5.7만호 달성(11월말 기준)
 - * '14년 착공 실적은 7.0만호 목표 대비 3.9만호 달성(11월말 기준)
- 실질적 준공(입주) 물량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물량 위주의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의 유형별 공급 목표 설정 필요
- 착공물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급 프로세스 개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'10.5월 지구지정되었으나, LH 재무여건 악화,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정상추진 곤란

* (면적) 17.4km²(525만평), (추정사업비) 24조원, (주택) 9.4만호, (인구) 23.5만명

-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대출, 행위제한 등의 부담이 가중되자 사업 전면취소, 주택지구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 요구

- '13.12월 검토 가능한 2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, 주민 및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금년 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을 발표하였음

□ 핵심성과

- “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” 방침결정(7.1) 및 발표(9.4)
-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방침결정(9.29) 및 국회제출(10.21)
- 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” 후속조치로서 24개 집단취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지구에서 제척하는 지구지정 변경 고시(12.9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리방안 마련 이후에도 모니터링 및 당초 계획했던 후속조치의 원활한 시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및 보증상품 출시, 설명회 등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

- 연내 30개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유도

□ 핵심성과

-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('14.2.6 개정, '14.2.7 시행)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영업이 가능토록 조치하고,

-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의 보증상품 출시(대한주택보증, '14.2월) 및 보증보험 취급기관 추가(서울보증, '14.8.1) 지정

- 아울러,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(5회, 405명 참석), 임대관리업 준비자 및 위탁검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(3회, 170명 참석) 하고 있으며,

- 등록상황 모니터링 결과, '14.11월말 기준 109개 업체가 등록(자기 7, 위탁 64, 자기·위탁 38)하는 등 꾸준한 증가 예상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한 육성 방안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 과제 주요내용

-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 추진

 핵심성과

- 민간 자본이 투입된 임대주택리츠 사업 발굴 및 추진
 - (NHF 제1호) 경기도 하남·김포·평택·화성의 공동주택 개발 부지를 매입하여 4,448호의 임대주택 공급 예정
 - (NHF 제2호) 대구, 광주, 경기도(시흥·오산)의 공동주택 개발부지를 매입하여 3,515호의 임대주택 공급 예정
 - (NHF 제3호) 경기(과주, 화성,안성) 및 대구의 공동주택 개발 부지를 매입하여 5,005호의 임대주택 공급 예정
 - (기타) 경기 의왕시(530호), 경기 용산구(567호), 서울 강동구(191호)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

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추가적인 정책방안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그동안 누적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에 대해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

□ 핵심성과

-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('14.2~6월말)
 - 전체 지구별 부지 성격 및 여건을 확인하여 타 주택유형 전환,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승인 취소, 민간에 활용 등 충분한 분석
-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마련 (9.30)
 - 정부는 지원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, LH는 재무여건 개선, 주택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 가능
 - (정부) 미착공 부지에 기 지원된 정부 지원금 중 '17년까지 약 7.4조원('14년은 0.94조원,) 환수하여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 예정
 - (LH) 공공임대리츠, 민간공동사업, 민간매각 및 사업취소 등을 통해 '17년까지 약 11조의 재무개선 효과 예상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14년에 마련한 장기 미착공 해소방안을 통한 15년 성과창출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임대주택 건설지역의 입주민에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인근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분담
 - * (국토부) 사회적기업 공간마련, 입주 및 퇴거관리 등 / (고용부) 사회적기업 대상정보제공, 단지별 적합한 서비스내용의 정보공유 등

□ 핵심성과

- '14년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유치계획*을 수립(1.28)하고, 유관기관(국토부·LH·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간 협의회 개최
 - * '14년도 유치목표(10개소) 달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강구, 입주업체의 자격요건, 서비스내용 등
- 각 지구별 공모를 거쳐 총 10개 단지에 10개 사회적 기업을 유치
 - * (강남·서초) 6.30 공모 → 8.12 선정, (8개 단지) 9.11 공모 → 11.3 선정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하반기 추진계획 상 유치대상기업 선정계약* 8건은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다소 늦어짐
 - * 계획 10월→ 실적 11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GB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개선 및 입주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

□ 핵심성과

- 하남감일·미사, 서울양원지구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리츠 반영 등을 포함하여 11개지구 지구계획(15회) 및 주택사업계획(24회) 변경 완료
-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입주('14.6) 전후에 발생한 다양한 현안 및 집단 민원을 정리함으로써, 안정적인 입주 및 사업준공 기반 마련
 - 기업이전(레미콘공장, 수산센터) 마무리, 훼손지복구지역 내 GB 재지정,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, 입주지원 점검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
- 중형(60~85㎡) 분양택지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고,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침 개정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(대중교통, 주민안전·편의시설 등)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됨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담당지구(30개)별 사업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현안 해결 및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하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지속 추진
 -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으로, 시흥목감지구(1천호) 지구계획 변경 추진

□ 핵심성과

- 화성비봉 및 창원가포, 남양주지금, 공주월송, 광명시흥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고 완료(7~10월)
 - 화성비봉지구는 통심위 조건사항 및 경관법 개정사항* 반영에 따라 최초로 경관심의 소위원회 심의·의결(8.6)
- 화성비봉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성 개선,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여 총 1,157.2만㎡ 지구계획 승인
- 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등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변경승인포함)
 -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: 수원호매실 등 총 4.5만호 승인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시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

◆ 성과목표 3. 지자체, 주민과 함께 행복주택을 건설한다.

1 행복주택 공급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목적)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
- ('14년 목표) 행복주택 2.6만호 사업승인 및 3천호 착공

< '14년 행복주택사업 목표 및 계획 >

구분	지자체 합의	선정협의회	사업승인	착공
상반기	1.8만호	1.0만호	-	-
하반기(누계)	2.6만호	2.6만호	2.6만호	3천호

* (상반기 실적) 지자체 협의 : 약 2.3만호(37곳), 선정협의회 : 약 2.0만호(26곳)

□ 핵심성과

- (입지 추가 확정) 수요조사 및 후보지를 발굴한 후 지자체 협의, 민관 합동 선정협의회*를 거쳐 최종입지 확정(총 3.6만호)

* 주택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입지 타당성 검증

- (사업승인 및 착공) 확정입지 약 3.6만호(55곳) 중 약 2.6만여호(37곳) 사업승인, 약 6천호(11곳) 착공 완료하여 목표 초과달성

< '14년 목표 및 성과 >

구분	지자체 합의	선정협의회	사업승인	착공
목 표	2.6만호	2.6만호	2.6만호	3천호
실 적	3.6만호	3.3만호	26,256호	5,993호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민편의시설 도입) 행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연계 제공
 - 관계부처간 지원원칙, 역할분담 등에 대한 공동 MOU 체결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우선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적용·지원
- (철도부지 효율화) 철도부지내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개발모델을 다양화하고, LH, 철도공사·공단간 협업체계 구축
 - 유관기관(국토부, LH, 철도공사·공단 등) TF를 구성, 역할분담 및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철도부지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

□ 핵심성과

- (주민편의시설 도입) 실무회의(3회), 현장워크숍(2회) 등을 통해 편의시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, 관계부처간(7개) MOU 체결(7.31)
 - * 고용·보육·문화·체육·가족·창업 서비스 등 9개 우선 연계 대상사업 선정
- (철도부지 효율화) 유관기관 TF를 구성·운영('14.3~5)하여 철도부지내 행복주택 사업모델 다각화* 등 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(7.31)
 - * 역세권개발 등 연계형, LH+철도공사·공단 협업형, 소규모 철도 유희부지형 등
- (점·사용료) 철도공사 부지는 관계기관간 기본방향*에 합의하고(7.3), 국공유지는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**으로 인하조치 완료(4.25)
 - * 50% 감면(감정가의 연 5%수준→2.5%수준), 인상률 제한 등
 - ** 요율인하(공시지가의 연 2.5%수준→1%), 인상률 제한, 공익시설 면제 등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젊은계층 우선 공급 등 행복주택 정책 취지를 실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
 -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규정
 - 지역여건에 부합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지자체 선정권한 일부 위임

□ 핵심성과

- 공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자문회의(3.18) · 토론회(3.26)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
 - * 행복주택 개발모델 창출연구(국토연구원, '13.7~'14.4)
 - ** 대학생 주택 운영방안(2인1호), 거주기간, 소득·자산기준 관련 세부의견 제시
- 지자체 의견 수렴('14.4월~5월)을 거쳐 공급기준 초안 마련
 - * (공급비율) 젊은계층 80%, 취약 및 노인계층 각 10% / (우선공급) 계층별 50%를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 / (거주기간) 대학생·신혼부부·사회초년생 6년
-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기준 확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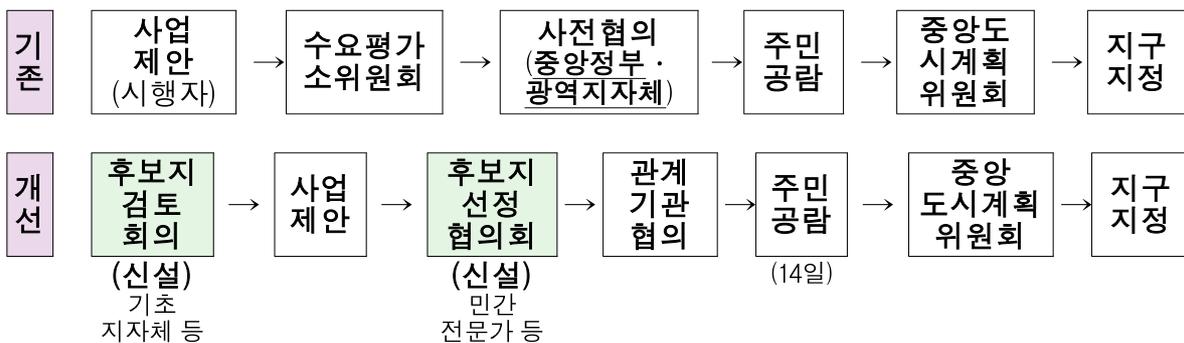
- 행복주택이 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심내 입지하는 경우 주민들의 거부감 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발생
-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 발굴 추진

□ 핵심성과

-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갈등 최소화를 위한 행복주택 후보지 개선방안 마련(1.17)

<후보지 선정시스템 개선방안>

- (발굴단계) 중앙정부 자체 검토 → 지자체와 회의체 구성·협의
- (선정단계) 민·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



- “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·운영지침”을 제정하고, 후보지 선정협의회 구성(3.10)
-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발굴된 후보지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개최(9회)하여 총 45개지구 33,781호 선정 완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지자체 인센티브 마련, 매뉴얼·홍보책자 배포, 수요조사 및 사업 설명회 개최

□ 핵심성과

- (지자체 수요조사) 지역으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·지방공사 대상 행복주택 수요조사(9~12월)
- (지자체 설명회)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 공유,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자체·지방공사 대상 설명회 개최(8회)
- (입지 추가 확정) 수요조사 및 후보지를 발굴한 후 지자체 협의, 민관 합동 선정협의회*를 거쳐 최종입지 확정(총 3.6만호)

* 주택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입지 타당성 검증

- (지자체 협의) 하반기 약 1.3만호(18곳) 추가 완료(총 3.6만호)

* 공주단장, 행복주택정책과장 등이 20개 지자체를 40회 방문·협의

- (협의회 심의) 4회 회의를 통해 약 1.3만호(19곳) 입지 추가 확정(총 3.3만호)

- (사업승인 및 착공) 확정입지 약 3.6만호(55곳) 중 약 2.6만여호(37곳) 사업승인, 약 6천호(11곳) 착공 완료하여 목표 초과달성

◆ 성과목표 4.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주거급여 체계를 개편한다.

1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주거급여 개편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, 기존 수급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를 완료 및 자가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법령제정)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「주거급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시행령 8.6, 시행규칙 9.30)
 - * 「주거급여법」 제정('14.1.24), 주택조사 고시 공포(3.7),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 지정 고시(LH공사, 3.7)
- (시범사업)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('14.7~9)
 -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'14.7~9월 까지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
- (주택조사) '14.3월부터 기존 기초수급자의 임대차계약 관계, 주택 노후도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행
- (자가가구 주거급여)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기준, 각 부처 주택개량사업과의 통합·연계방안을 포함한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방안 확정*

◆ 성과목표 5. 서민주택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개편한다.

1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기금 개편) '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「주택도시기금」으로 개편
- (지원방식 다변화) 기존 단순 용자 외에 출자, 투융자(메자닌), 공적 보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→ 기금을 지렛대로 民資 유치
- (전담 운용체계 구축)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,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'대한주택보증'을 전담기관 지정
- (기금 관리 선진화) 기존 단순 용자 외에 출자, 투융자 등 지원 방식이 다각화됨에 따라 기금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('14.10)
 - 기금의 중장기 손익 및 현금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전망 시스템 및 금리조정 시스템 구축('14.6)

□ 핵심성과

-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(국회 본회의 통과 12.9)
- 기금 개편 TF를 통해 기관간 업무 이수관 방안, 각 기관간 협력 체계, 대주보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
- 기금 중장기 재무전망 시스템('14.4) 및 금리조정 시스템 구축('14.6)

◆ 성과목표 6.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킨다.

1 아파트 생활분쟁 줄이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아파트 생활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, 아파트 관리 전문 법률(공동주택관리법)을 제정하고,
 - 아파트 “층간소음 기준”을 마련하며, “아파트관리 지원센터” 설치 및 운영

* 민원상담, 회계·시설관리 등 진단, 공사·용역 자문 업무 수행, ‘14년은 상담 3천건, 진단 40건, 공사·용역 자문 5건 수행 계획

□ 핵심성과

- ①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정 : 법률안 국회 발의(김성태 의원 대표발의, 7.31),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상정 및 계류(12.23)
- ②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공포 : 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 (국토부·환경부 공동부령) 제정·공포(6.3)
- ③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·운영 : 지원센터(“우리家 함께’ 행복지원센터) 개소 및 운영(4.8), 민원상담 11,149건(12.19 기준), 진단서비스 88건, 공사·용역 자문 10건 수행

◆ 성과목표 7.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든다.

1 노후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단독주택지를 보전·관리하면서도 주거환경과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(건축협정제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) 토지·노후주택 소유주가 협정을 맺고 리뉴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시범사업 추진
- (한국건축규정(KBC) 구축) 복잡한 건축관련 법령·기준을 통합 안내하고 설계·시공·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'KBC' 구축 기본전략(ISP) 수립

□ 핵심성과

- “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”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(9.3)
- ‘건축 협정 시범사업 추진단’ 구성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
 - 4개 대상지*에 대하여 지자체 등으로 ‘건축 협정 시범사업 추진단’을 구성하여 협정체결 등 시범사업 추진(9.23)
 - * 서울(금천), 부산(중구), 경기(수원), 인천(동구)
 - 건축협정의 체결, 지원,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(10.14)
- KBC 정보체계 구축 ISP 용역 완료 및 R&D 사업으로 추진
 - 건축서비스 포털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ISP 용역을 완료(9.22)하고,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을 위한 R&D 사업 추진(11.11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신축주택(15년)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'09년 기준주택 대비 40%로 상향하는 '친환경주택 건설기준(고시)' 개정하고,
-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착공(서울 노원구, 121세대) 및 공동주택의 내구성·가변성·수리용이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'장수명주택 인증제도' 도입,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시 의무화

□ 핵심성과

- 「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」 기준을 개정('14.12월)
- “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”를 서울 노원구에서 착공('14.11.25)
- 우리나라의 건축 수명이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,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“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” 마련('14.12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친환경주택건설기준 개정) 강화된 설계기준 및 신규설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 제작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
- (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착공) 예정대로 연내 착공하였으나, '16. 하반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세부방안 마련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필요
-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및 안전 진단 등 하위기준 마련

□ 핵심성과

-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기준 마련·시행('14.4~6)
 - 주택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·공포('14.4) 및 수직증축 하위기준 (3개고시) 제정·시행('14.6)
-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강화('14.1~5)
 -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 시행 보도자료 배포(4.22), 주민·업계 간담회 및 법령 설명회 실시(4회 : 1.17, 2.19, 2.20, 4.2)
 -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자체 법령교육 실시(4.1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수직증축 추진단지 등 실제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필요

【전략목표Ⅲ】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.

◆ 성과목표 1.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.

1 규제총점관리제

(1) 평가결과

과제 주요내용

-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개혁이 필요
- 이에, 규제 건수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「규제총점 관리제」 도입
 - 국토부 전체규제(약 2,400건)에 국민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(가중치)을 부여하고, 등급별 점수를 반영한 총점으로 관리
- 규제총점의 단계적 감축 추진
 - 기존 규제에 부과된 총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, '14.12월까지 전체 총점 대비 15% 감축하고, '17년까지 30% 감축 추진

핵심성과

- 규제총점 16,360점 감축 및 기존규제 202건 감축 완료
 - * 당초 '14년 감축목표 15%(12,000점) 대비 36%를 초과달성
 - * 경제부처 감축목표(기존규제의 12%, 국토부 193건)의 105% 달성
- 특히, 규제점수 50점 이상 핵심규제에서 감축점수의 62.8%를 감축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실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도시첨단산단)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 (20~50만㎡)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('14년 3개소, '15년 6개소 추진)
- (노후산단 재생) 1차 시범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 하고, 추진성과 확산을 위해 2차 사업지구를 선정
 -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, 관계부처 협업을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

□ 핵심성과

- 도시 인근 GB해제가능지역 등에 산업·상업·주거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 9개소를 선정하여 IT·BT 등 新산업 수요에 대응
 - * '14.3월 1차지구 3곳(인천, 대구, 광주), '14.12월 2차지구 6곳 선정
- 노후산단 재생 2차지구 4개소*를 선정하고, 산업부와 공동으로 「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」을 수립하여 산단 리모델링 추진기반 마련
 - * 2차지구 안산 반월, 구미1, 춘천 후평, 진주 상평 선정('14.3 제5차 무투회의)
 - 전국 83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계획 수립
 - 국토부·산업부가 함께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촉진하고자 「노후거점 산단 특별법」을 공동 입법('14.12)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
- 복합용지 제도, 네거티브 업종계획, 용적률 등 산단개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산단 재생 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
 - * 산업입지개발법 개정('14.1.14),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('14.7.14, 12.16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추진배경/목적)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와 밀도(건폐율·용적률) 등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하거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
 -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규제의 경직성 완화 필요
- (주요내용) 용도지역·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신설

□ 핵심성과

- 지자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('14.2.5., '14.6.18.)
- 국토계획법 개정안 이노근 의원 발의('14.6.25.)
-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수행('14.8.22~)
-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마련 지자체·전문가 회의개최('14.9.22.)
-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 개최('14.9.26.)
- 국회 토론회 개최('14.10.27.)
- 국토계획법 개정안 개정 완료('14.12.9.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기반시설에 문화·체육·복지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 허용*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완료(14.12), 기반시설 용도 전환 활성화** 및 거점시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안 발의(14.12)

* 예시) 도서관+어린이집·소극장·체육관 / 연구소+산업전시관·도서관·복지센터

**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

□ 핵심성과

- (편익시설 확대)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*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·공포(9.5, 12.31)

* (당초) 매점, 휴게음식점, 화장실 → (변경) 문화시설(소극장, 영화관 등), 복지시설(어린이집, 사회복지관) 생활체육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

- (복합개발 및 용도전환 활성화) 기반시설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(12.9)

- 기반시설 복합 설치, 용도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(12.10, 시행령 법제처 심사)

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이하 장기미집행시설) 용도전환 활성화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대책 마련 및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(12.29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임대주택 용지 매매각 시 분양주택 용지(국민주택규모 이하)로 변경을 허용하고, 산단·물류단지 조성시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, 저수지 등으로 확대
-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민간 출자한도를 확대(1/2미만 → 2/3미만, '15년까지)하고, 산단 등 조성 시 민간 대행개발 허용
- GB해제시 절차를 간소화하고, 해제취락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축소 허용 및 용도지역 선택도 다양화

□ 핵심성과

- GB 해제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('14.3.12, 대통령 보고)
 - 무역투자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련 지침 개정(6.11)
- 지침 개정 직후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서면점검(7.15) 후 점검회의를 개최(8월, 11월)하여 지자체를 적극 독려
 - 이에 따라 해제 후 사업 지연지구의 착공(2개), 개발계획 변경(3개)을 통해 정비를 촉진하고, 신규 GB해제(4개)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과제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특화산업) 특화산업 집적도, 거점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, 타당성 분석을 거쳐 지역별 입지지원 방안 마련
- (정주환경 개선) 개발계획 수립시 주거, 후생복지 등 정주계획을 반영하고, '17년까지 행복주택 1만호 공급

□ 핵심성과

- 지역 특화도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인 지역특화산단 5개소를 선정('14.3,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)하고,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「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*」 마련('14.12.17, 총리주재 국토정책위)
 - 거점시설 입지 우선공급, 개발계획 변경 지원 등 지역내 특정산업 직접화를 위해 「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」 개정 등 제도개선 병행
-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큰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 개정(8.4)
-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미니복합타운을 3개소 지정(포천, 완주, 창녕)하고, 산단형 행복주택 3.3천호 공급계획 확정('17년까지 1만호 공급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6.4 지방선거로 신임 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대형 토목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제천 미니복합타운 지구지정 일정 순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토지 이용 관련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요건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
 - 건축(건축법), 공장설립(산집법), 개발행위(국토계획법) 관련 인허가 절차의 통합·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추진(One-Stop 서비스 구현)
 -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심의 효율화 및 조기화

□ 핵심성과

- (특별법 제정) 건축(건축법), 공장설립(산집법), 개발행위(국토계획법) 관련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」 제정
 - 이견 있는 환경부, 산업부 등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당초 법 취지 및 목적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
 - 30대 경제활성화 핵심법안 중 하나로 청와대, 기재부, 국조실 등을 통해 집중 관리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폭넓게 홍보
- (도시계획위원회 개선) 심의 사항 단순화(체크리스트), 반복심의 제한(3회), 안건처리 기한(30일), 도시 관련 전문가 위촉,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배경 및 목적)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(임의지침, 법령 불일치 조례), 소극적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
 - 지속적인 건축법령 개선, 규제정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로 인해 국민은 여전히 건축규제가 많다고 인식
- (주요내용)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(172개 시군구) 전수조사,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, 민원검토 전문기구인 '건축민원 전문위원회' 설치 운영

□ 핵심성과

-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정비개선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하여, 1,200여건을 협의하고, 696건은 연내 폐지 등 정비 완료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 제정·시달(7~9월)
- 임의규제 개선등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 등 제도화(5~11월)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근거 마련(11월)
-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행정건실화 점검 실시(11월)
- 민간위원 위주의 객관적 민원조정기구 설치(5월~11월)하고, 국토부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(7~12월)하여 21건의 불만민원 처리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당초)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재검토, 타 부담금 비용인정 타당성 재검토, 개발비용 항목 구체화, 종료지가 검증제 도입 등 관련 규정 전면 재정비
- (변경) 납부기일전 징수제도 폐지, 종료지가 검증제 도입, 부담금 비용인정 범위확대, 개발비용 산정 기준 등 마련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투명성 증대) 개발부담금 종료지가 산정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제를 도입, 수용성을 높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송이 크게 감소 예상 (연간 200건)
- (기업부담 완화) 학교용지부담금, GB보전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
 - 개발사업구역 밖 진입로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,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(조사·설계비 등)은 부과기간 이후에도 인정
- (민원발생 감소)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원인과 부과관청간 다툼이 많아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감소 ('90년 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전경련 등 기업들은 개발부담금이 과도하다고 매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

◆ 성과목표 2.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.

1 국적항공사와 공항의 경쟁력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) 동북아 저비용 항공 시장을 선점*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·추진
- (공항간 효율적 역할분담)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김포·인천 등 공항간 상생발전방안 마련

* 「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('16~'19)」에 포함하여 확정('14.12)

□ 핵심성과

- (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) 24개 과제 확정('14.6, 국무회의 보고)하여 5개 과제 완료*, 19개 과제 정상추진**

* '공항간 빈비행기 운항 착륙료 감면'('14.7), '부정기편 허가기간 단축'('14.12), '사업용 항공기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연장'('14.12) 등 영업환경 개선

- 국적 LCC '14년 국제노선 24개, 국내노선 3개 신규 취항, '14.11월 누적 전년 동기대비 약 21% 성장한 17백만명 수송
- (공항간 역할분담) 공항별 경쟁력강화방안, 제2차 항공정책기본 계획에 반영·확정('14.12 항공정책심의회 의결,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)
 - 김포공항을 비즈니스 항공기 중심공항 육성,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 경쟁력 강화, 제주, 청주 등 지역 주요거점공항 발전방향 제시
 -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간·공항간 갈등을 조정하여 종합적인 공항경쟁력 강화기반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전략적 항공네트워크 확대) 항공산업 발전,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한 전략적 항공회담 추진으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, 국민의 여행 편의 제고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도모
 - 중기 국제항공 정책방향 수립 및 이에 따른 전략적 항공회담 추진
- (ICAO 이사국 활동역량 강화) ICAO 이사국으로서의 리더 역할 수행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구축 및 향후 우리나라의 이사국 파트상향 추진 기반 마련 필요
 - ICAO 등 주요 국제회의에 의제를 제출·발표하고,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전략적 항공네트워크 확대) 프랑스, 몽골, 중국, 스페인 등 14개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공급력 증대 등 11개국과 합의(합의율 78.6%)
 - * (프) 공급석 21.7% 증대로 한-파리간 좌석난 해소 및 다양한 스케줄 제공
 - (몽)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한 부산-울란바타르 노선 개설(주2회)에 합의('16.하계~)
 - (중) 17개 여객 신규노선 주51회, 12개 여객 기존노선 주39회 운수권 확보·배분
 - (스) 한-스페인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하여 신규 항공수요 창출 가능
- (ICAO 이사국 활동역량 강화) ICAO 이사국 파트상향 추진계획 VIP 보고(4.15, 국무회의), 범정부 TF팀 구성(4월), ICAO 이사국 파트상향 추진 로드맵 수립(7월), ICAO 고위급(이사회의장, 사무총장) 면담(5월, 10월), ICAO 등 주요 국제회의 제출(25건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항공레저를 국민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'14년도부터 이착륙장 조성과 항공레저파크 조성 추진
 -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, 이착륙장 설치근거 마련 등 항공레저스포츠의 제도적 기반 마련
- 국토부장관배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개최, 항공체험프로그램, 청소년 항공교실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공레저 저변 확대

□ 핵심성과

- 항공법령 개정*하여 이착륙장 설치근거, 사업등록 기준 등 항공레저스포츠의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항공법 1.14 개정, '14.7.15 항공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- 9개 이착륙장 후보지 선정·지자체 통보(3개 지자체와 MOU 체결) 항공레저센터 설치의 새만금기본계획 반영 등 실제사업 착수
- 최초로 항공레저스포츠제전(체험, 대회) 및 청소년 항공교실 개최(11월), MBC·채널 A 기획홍보(2월, 12월) 국민생활속의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민간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
 - 국산 소형항공기의 실용화 보급, 항공정비(MRO)산업의 육성 및 항공기 제작국가에 걸맞는 비행시험인프라 개발구축 추진

-
- 1) 4인승소형기 제작기술개발에 이은 국내·외 보급을 위한 실용화 방안 추진
 - 2) 항공운송산업(세계6위)에 비해 열위에 있는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
 - 3) 항공기제작, 설계 및 부분품 등에 대한 인증 및 성능시험 수행을 위한 인프라구축
-

□ 핵심성과

- (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) 우리부 교통분야 R&D성과물로는 최초로 4인승 소형항공기 KC-100을 실용화·사업화 하는데 성공
- (비행시험인프라) 제작된 항공기 등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완료 및 기관별 업무분담 명확화
- (항공정비 산업육성) 국내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완료 및 R&D지원 방안 마련
- (법률제정) 항공기제작·정비분야를 고루 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법의 국회 적기통과('14.4.28, 5.21공포) 및 시행령 마련('14.11.21시행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추진배경)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수·출입 지원을 위해 항공선진국·거대시장과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한·미 항공당국 간 기술협력 여건 조성과 항공기·장비품·부품의 안전성의 상호 인증을 통하여 對美 수·출입 활성화
- (주요내용) 미국과 합의한 항공기 부품급 상호인증(항공안전협정, '08)을 소형기급까지 확대하여 국산항공기(KC-100) 수출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이행절차서 협의) 美 항공청과의 양자 협력회의에서 항공안전협정 이행절차서 서명을 '14년 내 완료기로 합의('14.1, 美)
 - 美 항공청과 이행절차서 개정문안 검토회의('14.5/美, '14.7/韓)
- (계획 및 결과 보고) 미국과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을 위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마련, 향후 추진계획('14.4) 및 최종(안) 보고('14.9)
- (최종합의) 국산 소형기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 확대체결 서명식 개최(10.28, 세종청사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과제 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 필요

◆ 성과목표 3. 공간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.

1

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구축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간정보 가공·유통 관련제도* 개선 추진방안 마련 및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개선** 등

* 공간정보 가공·유통관련 저작권 보호, 원천정보의 가격정책, 보안 대책 등 공간정보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유통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등

** 공간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무료 S/W개발·보급, 공간정보활용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

□ 핵심성과

- 공간정보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(대통령령) 개정(12.23 국무회의 원안의결)

*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

- 공간정보 수집·가공·유통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간정보유통 활성화방안 연구 및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선진화 추진

- 민간 수요가 많은 문화재정보, 산지정보 등 53종의 신규 국가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확대 개방('13년 38종)

- 수치지형도 등 다양한 국가공간정보 10만건을 민간에 유통('13년 77천건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미래전략 등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
 -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와 민간정보를 융합한 융합DB 구축과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토록 지원

□ 핵심성과

- 공간정보, 행정정보, 민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융합한 공간빅데이터 구축
 - 128종의 공간정보, 행정정보 및 민간 정보를 융합하여, 공동활용 가능한 15종 융합DB 구축
- 공간빅데이터(융합DB)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분석모델 구축
 - 부동산, 교통, 지역개발 등 정책업무에 공동활용할 수 있는 14개 분석모델 구축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간빅데이터 감리용역의 감리대상인 “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 사업”의 검토기간이 연장되어, 이로 인해 감리발주가 지연

(1) 평가결과

 과제 주요내용

-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용유발형* 산업인 공간정보 분야의 청년 취·창업을 지원하여 국가 고용률 제고를 도모

* (10억 투자시 고용효과) 공간정보산업 12.5명 / 서비스업 10.5명 / 제조업 5.4명

 핵심성과**[인재양성·취업지원] 고용연계 아카데미 교육생 취업목표 100% 달성**

-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'고용연계 아카데미'에 전원(30명) 교육수료 및 취업활동 지원*을 통한 취업률 목표(90%) 달성
-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융·복합 활용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선발완료(석사21명, 박사4명)

[창업지원] 공간정보 창업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

-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 개정안 국회발의(7.22 김재원의원 대표발의)를 통하여 당초 제출한 목표(법안국회제출) 달성

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 목표의 적극적 설정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U-City 발전전략 마련) 정부 3.0에 맞추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, U-City 활성화, 해외진출전략 등 마련
- (법·제도 개선) 기성시가지에서의 U-City 적용, 사업계획 및 실시 계획 통합, 정보시스템 연계·통합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 추진
- (U-City 플랫폼 기반 구축) 도시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보·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 보급 기반 조성

□ 핵심성과

- (U-City 발전전략 마련) 도시, ICT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ICT 기술 동향, 시민 요구를 반영한 U-City 발전전략(안) 마련
- (법·제도 개선) U-City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U-City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U-City 법률 개정안 마련
 - 도시재생사업을 U-City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, U-City 사업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U-City 법 개정안 발의(11.3)
- (U-City 플랫폼 기반 구축) 도시안전망 구축 및 도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U-City 통합플랫폼 보급 예산 신규 확보('15년 6억원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주요 추진일정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과제 관리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SOC 사업의 계획, 설계·시공·감리·유지관리 단계별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시공·준공측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
 -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합리적, 과학적, 경제적 계획수립·설계, 현장 공간의 효율적 이용, 공정모니터링에 의한 건설기간 단축 등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

□ 핵심성과

- SOC사업 생애주기별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
 - 연구중간보고(8월), 전문가워크숍(2회, 10월, 11월), 이해관계 전문가토론회(1회, 11월), 연구최종보고(12월)
 - SOC사업단계별 법제화 추진 방향 및 모델 수립, 모델 적용을 통한 제도개선안 2건 도출

□ 개선·보완사항

- 정책·기술분야의 최신 동향을 고려하여 정상 추진하였으며, 추가적인 개선분야 발굴을 위한 차년도 연구사업 발굴
 - 개발된 활용모델의 실 적용을 위한 기술지침 제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속 연구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국산 SW제품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품질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증하기 위한 기준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·운영

- 금년에는 우선 모든 지자체에 도입이 되어있고 해외 정부에서 관심이 높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(KLIS) 중심으로 세부 기준 마련

* KLIS 내 외산 SW에만 연간 37억원의 로열티와 유지보수 비용 발생

□ 핵심성과

-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품질인증 기준·절차 등을 마련하고 시험평가 및 제도운영지원을 담당할 인증기관 지정
- 공간정보 분야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OGC 총회 참석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, 공간정보 新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내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형 표준제정을 주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간정보 분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임을 고려하여
 - 성급하게 품질인증의 절차 등을 고시하기 보다는 우선 1개 시스템(KLIS)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*를 활용하여 유휴 국·공유재산 발굴 및 국유재산시스템 연계로 국유지 개발·매각 등 효율적 관리 지원
- (관련정책) 국정과제 “[41]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관리 효율화”와 관련하여 공간정보 기반 “부동산 통합정보”를 활용한 협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유휴재산 발굴)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하여 유휴 국·공유재산을 발굴하고, 발굴된 재산에 대한 건물 저축정도 분석결과* 제공
- 국유재산 정보의 누락·불일치 방지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협업으로 부동산통합정보와 국유재산정보의 융합·활용체계 구축
 -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국토부)과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(기재부, 운영지원과)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도모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유휴 행정재산 조사 범위 축소를 위해 기타 소유 건물 중 개인 소유와 공공업무 수행기관 소유(공사, 공단 등) 등 상세분석 필요
 - 건축물대장의 주용도, 세부용도 및 인접 토지 지목·소유구분을 추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건물대장 기재 오류(지번 등) 제외 방안 강구
 - GIS 건물통합 정보만 존재시 불법건축물 여부 등 향후 조사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등록사항과 토지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*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('12~'30년, 1조 3천억원)

□ 핵심성과

-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선행사업 완료(188개 지구)
 - 10개 시·도, 29개 시·군·구, 188개 지구, 9,626장 지적도 변환 완료
-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 - 2개 지구(경기도 수원시, 전남 함평군), 2,427필지(163도곽)
 - * 항공측량 활용 및 사업지구 지정 방식(지구→리동단위) 변경 등
- '14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지역 선정 및 착수
 - 17개 시도, 77개 시군구 95개 지구(25천필지) 실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수시배정된 예산의 적기배정으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
 - '14년 사업예산의 수시배정 지연(10.14 배정)으로 사업착수 및 관련 후속일정이 지연됨에 따라, '15년에는 적기에 예산이 배정토록 노력

◆ 성과목표 4. 해외에서 건설산업 성장 모멘텀을 발굴한다.

1 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수익성 제고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해외건설 수주확대) 최근 건설경기 장기 침체상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 적극 지원
 -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에 정책금융을 참여시키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, 타당성 조사를 통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발굴
- (수익성 제고지원) 장기적인 방향에서 산업의 수익성을 높여 질적 체질개선도 병행
 - 해외건설기업의 사업 리스크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 및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제공(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)

□ 핵심성과

- 금융지원 강화 및 기술개발·수출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
 -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GIF(1호)를 정책성 펀드로 개편* (‘14.6)하고, 타당성조사 8건** 선정·지원(9.16, 20억원)
-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(해건협)를 신설(‘14.2)하여 해외건설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Think-Tank 기능 및 해외사업 리스크 정보 제공 등 수행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수주지원단 파견, 해외 발주처 초청을 통한 비즈니스 외교 실시
 - 해외 발주처 면담, MOU 체결, 건설협력포 개최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마련하고,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
- 발주처 초청행사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 개최
 - 주요 프로젝트 설명회, 발주처-업체간 1:1 비즈니스미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

□ 핵심성과

- 고위급 수주지원단 8회 파견, 해외발주처 초청 3회 실시
 - 쿠웨이트 교량건설(5.7억불) 수주, 준공승인지연 애로사항 해결 등
 - 미얀마, 쿠웨이트, 에콰도르, 코트디부아르 등과 MOU체결(5건)
 - 한-스페인 건설인프라포럼 개최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방안 논의
- GICC 2014, 28개국 38개기관 69명, 국내업체 500여명 참석
 - 7개국 고위급 면담, 34건 프로젝트 설명회, 총 532건 상담 실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성과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중동·플랜트·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수주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 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장·공종 다변화 추진
- 「관리지침」 개정을 통해 업체지원방안 현실화, 사업설명회 개최, 사업선정 공정성/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과정 강화
- 사업 시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철저한 사업관리·감독

□ 핵심성과

- 「관리지침」 개정 2회 실시(1월, 12월)
- 선정 前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(2.17),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'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발전방향 세미나' 개최(12.9)
-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전면개편(분과위 신설, 30명 풀단 마련)
- 총117건 49억원 지원(4월, 9월 2차례 선정), 5개국 현지집행상황 점검
 - 누적수주율 10%, 업체-발주처간 MOU 4건 체결, 중남미·아프리카 20% 이상 중점지원, 플랜트 外 공종 70% 이상 중점지원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해외건설업 8종의 각 특성이 다르므로, 평가기준 및 관리에 있어서 업계간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'15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'15년 행사비 확보(국비 20억원), 세계물포럼조직위 인력 확충(환경측 인사 등 5명 증원), 포럼 프로그램 도출('14.12월)

□ 핵심성과

- (15년 행사비 확보)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수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목표인 행사 개최 최소비용 20억원 이상을 정부안에 반영(29억원)하였고, 예산국회시 추가로 31억원의 국비 확보

* 국비 목표치 20억원 → 달성치 60억원(초과달성 40억원)

- (조직위 인력확충) 행사준비 본격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, 국토부·지자체 위주의 세계물포럼조직위 구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조직위에 환경측 인사(5명)를 충원하여 3과에서 4과로 조직 개편('14.4)

* 인력확충 현황 : 5명 증원 ⇒ 환경부 1(4급 1), 환경공단 3, 환경산업기술원 1

- (포럼 프로그램 도출) 과정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주제 결정 후, 세션을 주관할 워킹그룹을 단계별로 선정('14.11)하고, 세션 제안서를 취합해 프로그램안 도출('14.1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'15년 행사개최에 맞춰,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

◆ 성과목표 5. 일류 육상운송사업을 육성한다.

1 물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해외 동반진출 지원) 국내 물류기업에 대해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 선진화 달성
- (한중 복합운송) 급성장하는 동북아 물류시장간 연계를 강화하여, 국내육상운송업체의 국제시장 진출 및 동북아 물류허브 가속화
- (글로벌 물류기업 육성)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*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도록 유도
 - 특히, 중소·중견물류기업에 대한 참여 기준을 완화(육성대상 선정기준 개정)하여 중소·중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

□ 핵심성과

-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(4.21)
- 한-중, 한-일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확대
 - (한-중) 평택-연운항 추가 개통을 통해 적용항구 확대 및 산동성에서 강소성 전역으로 트레일러 운행 구역 확대(7.30)
- 「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1.4)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근거*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추진 배경) 철도공사의 철도운영 독점에 따른 부채 증가와 경쟁력 약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「철도산업 발전방안」 마련 (‘13.6.26 발표)
- (수서 KTX 경쟁도입) 코레일과 차별화된 저비용·고효율 구조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여 공기업 개혁의 대표모델로 정립
- (물류 경쟁력 제고) 여객과 물류 통합 구조를 개선하고, 투자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철도물류의 발전기반 조성

□ 핵심성과

- (수서 KTX 경쟁도입) 수서 KTX 회사는 철도공사로 부터 인적·재무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경쟁이 가능한 형태로 설립
 - 기존 철도공사 방만 경영 사례를 원천적으로 개선한 운영구조를 확립(‘14.4)하고, 서비스 차별화 등 비교경쟁 여건 조성
 - 공공기관 투자자로 주주를 구성하여 공영 지배구조 확립(‘14.12)
- (물류 경쟁력 제고) 철도공사의 물류운영에 대한 투명성,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운영구조 개편 방안 마련 (‘14.12)
 - 철도공사 물류부문은 과도한 부채비율, 노조 반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강화된 사업부제 시행 후 자회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감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*
 - 택시발전법 제정에 따라 '14년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자율감차* 시행('14.下~'15.3월 시범사업, 사업기간 '15~'19)
- CNG 택시 전환 및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
 - (당초) LPG 가격 안정을 통한 택시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CNG개조(448대) 및 충전소(2개소) 건설비용 일부 지원,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
 - (변경) CNG 가격 상승(경제성 ↓)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로 성과지표(CNG개조 448→40대, 충전소 2→0개소)를 변경, 유가보조금 지급 지속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감차 국고보조금 지원 목표 초과달성 및 실태조사 95.4% 완료(11.3 기준)
 - 자율감차 시행기준 마련(6.12), 시범지역 선정(대전, 1.23), 감차위원회 구성(7.17), 3차례 감차위원회 회의(8.19, 9.30, 12.16) 등 시범사업 원활히 추진 중
- CNG 택시 개조 100대(강원도 원주) 국고보조금 지원(11.18) 및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 개정(12.10)
 - CNG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로 사업계획이 축소(대구, 448→0대, 충전소 2→0개소)되었으나, 적극적인 추가조사(7~9월)로 수요발굴(원주, 100대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동물류 우수사례 개발·보급,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, 화주기업의 인식제고 활동 등을 통해 공동물류 활용률을 제고('13. 1%→'14. 5%)
- 중소, 중견 화주기업의 다양한 업종별, 지역별 공동물류컨설팅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확대 지원('13. 22개사 → '14. 30개사)

□ 핵심성과

-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“물류서비스 육성방안” 마련(8.27, 무역투자진흥회의 의결)
 - 중소 화주기업에 대해 3자물류 세액공제를 확대(3%→5%)하고, 자가·2자물류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지원 강화*
- 3자물류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물류비 절감(12.2, 12.18)
 - 자가, 자회사를 물류영위하는 화주기업 16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3자물류로 전환(16개사중 15개사 전환, 93.8%)을 유도하여 물류비 절감(13%이상)
- 공동물류 활용률을 '13. 1%에서 '14. 5.4%로 대폭 제고('14. 12.1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성과에 대한 확산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택배차량 추가 공급 등 택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택배분야를 고부가가치 신성장 물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
- 택배 물동량 변경 추이 및 차량 수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 등 '14년도 화물차 공급기준에 반영

□ 핵심성과

< 택배용 화물차 증차 >

- 택배차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별도 수급분석을 거쳐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(1.2만대 수준)을 추진
- 개인 택배기사 및 택배업체 대상 신규허가 추진

< 택배서비스 평가 >

- 택배서비스 평가방안 및 시범평가 연구용역 실시('14.5~10)
-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(11.26, 보도자료 배포)

< 택배 제도화 >

- 업종개편 및 지입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 연구용역' 실시(~'14.11월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물류시설 활성화를 위해 투자저해 요인이었던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, 물류단지 추가 공급 및 복합물류터미널(ICD) 기능 강화

□ 핵심성과

- (물류단지 총량제 폐지) 장관님이 평택 물류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총량제 폐지계획 발표(3. 27), 총량제 폐지(6. 27)
- (물류단지 공급) 물류단지 준공 : 3개소(209만m²)
 - 약 7,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(ICD - CY 상생) ICD(영남권, 중부권)와 인근 철도CY 상생 추진
 - 영남ICD 정기화물열차(B/T) 운행개시 및 칠곡CY 재개장('14. 2월)
- (내륙물류기지 기능조정 추진)
 - ICD 기능조정 계획(안) 마련 : 내부방침 결정(장관, '14. 5. 2.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실수요 검증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확대를 도모하고,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 추진계획·기준(안)을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Non OEM 부품(대체부품)의 성능·품질인증(민간인증) 제도를 도입
- 튜닝 법규 정비 및 튜닝부품 안전성 강화
-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상을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

□ 핵심성과

-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(1.7) 및 시행규칙(10.31) 개정
- 관계부처 합동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발표(6.17, 제22차 경제장관회의)
- 튜닝 규제완화를 위한 자동차 구조변경 규정 개정 고시(6.24)
- 튜닝규제 완화를 반영한 알기 쉬운 튜닝매뉴얼 5만부 배포('14.10)
-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12.3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계기관(산업부)의 반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총리실,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'15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자동차 등록·매매·정비·튜닝·부품유통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·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·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도입 추진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한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보급 지원을 통한 상용화 기반 조성

□ 핵심성과

-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(2.3)
-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(2.26, 김태원의원 대표발의)
-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, 장애인단체, 버스연합회 등 간담회 개최(1.29, 2.21, 3.4, 5.2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선 및 준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추가 의견수렴에 따른 표준모델 기준 개정 지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물류산업 수요자 및 공급자가 물류자원(시설, 장비, 인력 등) 정보를 공유·직거래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범시스템 구축
 - 온라인 물류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및 물류시장의 효율성 개선 기대

□ 핵심성과

- 온라인 물류직거래 장터 시범서비스 구축
 - 시범서비스 구축 방침결정('14. 3월)
 - 시범서비스 수요조사 완료('14. 7월)
 - 시범서비스 개발 완료('14.11월)
- 온라인 물류직거래 장터 시범서비스 운영
 - 시범서비스 운영 실시('14.12월~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향후 시범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스템 기능 보완 필요

◆ 성과목표 6.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.

1 리츠시장 규제완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, 부동산 시장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* '13년 말 현재 총 80개 리츠가 운영 중, 자산규모 11.9조원,

** 주요국 리츠 시가총액(조원) : 한국(0.2) 미국(682), 일본(55), 호주(108)

□ 핵심성과

-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(안) 마련(5.16)
 - 진입규제(인가제→등록제)완화, 감정평가절차 간소화, 개발사업투자 비율 자율화 등 리츠 운영 과정 전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
- 규제완화가 시급한 법령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 추진
 -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식 공모 의무 완화 등(김관영, 5.29)
 - 리츠 시장 진입규제(인가제→등록·신고제) 완화관련(이노근, 6.30)
- 기타 리츠 자금모집 및 운영관련 규제완화는 정부입법으로 추진
 - 개발사업 비율 자율화 등을 다른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(9.29) 하고, 부동산 처분 제한 완화 등을 다른 시행령 개정안 공표(10.28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'89년 감정평가제도 도입 이래 평가업계는 큰 변화 없이 정체상태에 있어 왔으며,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
 - 업계의 신뢰성 회복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을 회계·법무법인 수준의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필요

□ 핵심성과

- 「부감법」, 「감정평가사법」 및 「한국감정원법」 제·개정안 발의
 - 현행 「부감법」을 3법 체계로 분리하고 감정원 공적기관화, 평가선례 정보체계 제출 의무, 협회 법정단체화 및 회원가입 의무 등 규정
- '한남더힐' 부실평가 후속조치로 국민신뢰 회복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'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대책' 발표('14.11), '실무기준' 개정('14.12)
-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사후 조치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 (연 3회)하여 부실평가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, 사전·예방적 조치로 감정평가 타당성 표본조사 실시(연 2회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련 분야의 갈등 조정·대안 마련 지속 추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중개법인 업무범위 확대) 부동산을 직접 취득·매각하거나 매수인에게 자금조달서비스 제공으로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반 조성
- (책임중개시스템 구축) 부동산거래 과정을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하고 분절된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·연계*한 단일지원시스템 구축

□ 핵심성과

- 그간 금지하던 중개법인의 매매업·대부중개업을 허용하고, 소비자 보호장치(자본금, 공제)와 연계하여 업역을 확대기로 결정(12.4)
 - 중개법인 업역확대 연구용역(2~9월) 및 협회등 관계자 간담회 실시(3회)
- '14년 국가정보화 지원과제로 선정(4.1)되어 '사전 타당성 및 실행방안 컨설팅' 실시(7~11월, 1.6억원) 및 전자정부지원사업(행자부)으로 확정
 - 관계부처 협의로 당초 단순중개에서 전자계약·RTMS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과정(계약, 실거래신고, 세무·등기 등)을 전자적으로 중복 없이 처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확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15년 예산 미확보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부동산 평가) 표준지, 표준 단독주택,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고, 과세지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,
 - 공시 및 실거래가격 간 차이, 지역·유형별 격차 등 문제 지속제기
- (부동산 조사) 「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추계사업」은 '97년 외환위기 당시 오피스 해외자본 혈값 매각 논란을 계기로 '02년부터 실시 중이나,
 - 조사대상에서 집합상가와 전통시장이 제외되어 결과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며 서민·소상공인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 발생

□ 핵심성과

- 주거용 부동산 평가업무 품질 제고
 - 표준주택(1월), 표준지(2월) 및 공동주택(4월) 등 가격공시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및 '14년도 부동산 공시업무 성과분석 실시(9월)
- 상업용 부동산 조사업무 품질 제고
 - 집합상가 표본설계 완료(5월) 및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 완료(10월), 상가임대동향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시행(11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현재 공표되고 있는 임대가격지수 이외에 수익률 등 기타 보유DB를 활용한 다양한 지수생산으로 활용도 제고 지속 추진

◆ 성과목표 7. 좋은 일자리를 나눈다.

1 미래산업 일자리 늘리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10년 단위의 “창조경제 중장기 R&D 전략” 수립을 통해 국토교통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, R&D 추진안을 마련
- 창의적 기술·아이디어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디딤돌 예산을 증대
- R&D성과의 상용화·사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을 하기 위한 “미래 먹거리 발굴 포럼” 및 “공공구매 협의체” 운영

□ 핵심성과

- 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&D 중장기 전략”수립(‘14.8)
-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R&D 예산 확대
 - ‘15년 기술사업화 예산이 전년(120억원) 대비 64억원 증액(53.7%증가)
- 국토교통 R&D 미래 먹거리 포럼 신설 개최(5회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지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고용률 70% 로드맵 발표('13.6.4) 이후, 기관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 수립
 -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
-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'14년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119개 신규 창출

□ 핵심성과

- '14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계획 점검 ('13.11~'14.2)
 - 1차 점검실시('13.11) 이후 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차 점검을 실시하고 목표치를 확정('14.2, 119명)
-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, 시간선택제 중간점검 및 이행 독려 ('14.9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지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안정적인 여성인력 확보 및 직장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확충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감면 필요
- 직장어린이집을 신·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 감면
 -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의 과밀부담금 감면 조항(17조) 개정

□ 핵심성과

-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방침 확정 (‘14.1월)
- 감면 방침,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국무회의* 보고 (‘14.2월)
-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개정안* 마련 (‘14.4~6월)
- BH 및 기재부, 복지부 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(7~12월)
- 과밀부담금 감면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 분석 (9월~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시행령 개정 관련 관계기관 사전협의 과정에서 추진일정이 순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무교육 확대 실시 및 중소기업 해외현장훈련(OJT) 지원 지속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직무교육)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*하고, 특히 영어·스페인어 등 외국어 전문교육을 강화*함으로써 업체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 공급

* 양성실적 : ('12년) 2,200명 → ('13년) 2,700명 → ('14.11) 2,500명(목표 3천명)

** 해외건설 비즈니스영어(440명), 스페인어(20명), 중국어(20명) 과정 '14년 신규개설

- (OJT 지원) 대기업에 비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여 해외공사 적기수행 지원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

* ('14.12) 중소·중견기업 32개사 신규채용자 302명의 해외현장훈련비 지원

- (마이스터고 개교지원) 해외현장 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전문인력의 장기적·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

* 서울도시과학고를 국내 최초 해외건설·플랜트분야 마이스터고로 정상 추진시키기 위하여 기숙사 설치비용 등 지원을 위해 '15년도 예산확보(20억원)

- (K-Move* 지원) 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지식·어학능력 교육(3개월) 후 바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건설기술자 경력DB*와 업체의 구인정보 및 기술자 구직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
- 건설Eng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(2개 대학)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양성 및 대졸 청년층의 양질 일자리 진출을 지원

□ 핵심성과

- 기술자 채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공·용역업체와 MOU 체결
- 기술자 경력DB 활용 및 분야별 특성 등을 반영한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리부 및 경력관리기관*간 TF 구성 운영
- 건설ENG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모집 공고(3월) 및 신청서 접수(4.30, 서울시립대 등 6개 대학 신청)
- 건설ENG 글로벌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('14.6)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('14.9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건설워크넷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관련 업체와 MOU 체결 확대(현 70개) 및 기능인력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추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'마을버스 여성일자리 창출 시범사업' 추진 대상 업체 선정 (2개사) 및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적합 직무 발굴·운영을 위한 컨설팅, 인건비·사회보험료 지원 추진
- '여성새로일하기 센터'를 통한 취업희망자 발굴,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교육 등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국토부-고용부-여성부는 버스운수업종에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추진 중('14.3.28, MOU 체결)
- 시범사업 참여 업체 대상 컨설팅 실시를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 발굴, 소요 인원 등 확정('14.4.30 완료)
- 지역고용센터·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실시(구직사이트인 워크넷 게시)
- 시범사업 참여 업체 대상 컨설팅 실시를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 직무 발굴, 소요 인원 등 확정('14.4.30 완료)
- 시내·마을버스 탄력배차 확대를 위한 「여객법 시행규칙」 개정(12.3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'마을버스 여성일자리 나누기'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성근로자 구직저조로 사업 성공을 위한 취업알선·재정지원 등 지속실시 필요

(1) 평가결과

 과제 주요내용

- (물류전문인력양성)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물류기업의 선진화·효율화를 위해 물류전문인력 및 기능인력 양성 지원

 핵심성과

-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 현장점검(9월) 실시
 - 사업추진 현황·실적, 자금집행, 교육프로그램 관리실태, 성과지표 등 점검 및 사업위탁기관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의견청취
-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(11.7)
 - 학교 내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현장경험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기업간 네트워크* 구축기회 제공
- 멘토단(구직멘토링제) 창단식 및 워크숍 개최(11.28)
 - (멘토단) 물류인력의 물류산업 이해도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구직 멘토링제 추진을 위한 멘토단 창단

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의 졸업생 중 취업률 제고 지속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차세대 항공 우수인력을 지속 육성하고 취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적역량 강화로 미래 항공안전 실현

* 조종인력(140), 특성화대학원(180), 인턴십(90), 기초인력(100) 등 연간 500여명 육성

□ 핵심성과

-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 2차사업 위탁기관 선정('14.4.11)
 - 사업신청한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(3.4~17)를 진행하고,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위탁기관* 선정
- 항공인력양성사업 '14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평가 ('14.8.19~8.20)
 - 신규 선정된 훈련사업자(2개) 및 항공특성화대학(7개)와 협약을 체결* 하고, '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운영위원회 평가
- 항공인력 양성사업 운영활성화 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('14.11.5~11.6)
 - 항공인력양성사업 위탁기관 및 실시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【전략목표Ⅳ】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

◆ 성과목표 1. 물에 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

1 낙동강 맑은 물 공급

(1) 평가결과

과제 주요내용

- 낙동강 주변지역은 수질사고*에 취약하므로 취수원 변경 등을 통해 부산·대구 등 영남권에 맑은 물 공급 필요
- (경북·대구) 공단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사고에 취약한 대구·칠곡 등 4개 시·군의 취수원을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으로 이전
- (경남·부산) 동부경남 및 부산시 등의 맑은물 확보(133만톤/일)를 위하여 강변여과수(68만톤) 및 남강댐 물 공급(65만톤) 추진

핵심성과

- (경북·대구) 구미시의 우려사항* 검증 및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『경북·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』 시행 (14.3~12, 건기연)
 - 국토부 장관이 울산(시장 면담) 및 구미(부시장 면담)를 방문하여 지역간 협력당부(6.21) 등 구미시 설득 및 지역갈등 해소 지속 노력
 -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갈등 해소를 대형 국책사업 신모델 제시
- (경남·부산) 강변여과수는 시험집수정(1공)을 우선 시공하여 지하수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해 「先 지역합의, 後 계획수립」 방식으로 사업절차를 개선('13.6)
-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, NGO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“댐 사전 검토협의회”를 발족('13.12)하여 소규모 댐*부터 검토 착수

* 원주천댐(강원 원주), 봉화댐(경북 봉화), 대덕댐(경북 김천)

□ 핵심성과

①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댐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

- 사전검토협의회 발족('13.12) 이후 6개월간 전체회의(5회), 현지조사, 기술분석 등을 거쳐 3개 댐(원주천, 봉화, 대덕) 검토 완료('13.6)
- 문정댐, 달산댐, 영양댐 등 후속안전 검토 착수('13.7)

②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도출

-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('13.7), 주민설명회·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완료('13.9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에 대한 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 및 정책개선점 도출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도시홍수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으로서 '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 계획' 등 도시하천 상습 홍수위험 해소대책 추진
 - 강우레이더 구축, 홍수정보 앱, 홍수위험지도 제작도 병행 추진

□ 핵심성과

[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]

- '도시하천 상습 홍수위험 해소대책' 수립('14.6월)
- 수차례 정책설명회·전문가 간담회, 대국민 정책공모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홍보 추진(5월~12월)

[홍수위험지도]

- 금강권역(180km)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 발주 및 착수('14.2)
- 금강권역(180km) 홍수위험지도 제작 완료('14.10)

[강우레이더 / 홍수정보 앱]

- 금산 강우레이더 공장인수검사 완료('14.3월) 및 홍수정보 앱 테스트 버전 개발 완료하여 시범운영 착수('14.6월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현행 수자원관리는 개별부처별로 **관련법**(하천, 소하천, 수질, 수력, 농업 등) 및 **시설물 관리**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
- ⇒ 하천·댐 등 유역내 개별시설을 통합 관리하고, 대체수자원 개발, 물관련 기술·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국토부-환경부 간 협업의 거시적 틀로 법 제정 합의를 유도*하고,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
- 제정안 전체 38조항 중 관계기관 이견이 있는 일부조항(2개)을 제외하고 협의를 대부분 완료
- 국토부·환경부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머지 이견(2개 조항)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하여 '15.2월중 입법예고 등 추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협의회 운영 및 실무자간 수시 논의 등을 통해 다각적 노력 중이나, 쟁점* 조율 등에 장기간 소요로 법 제정안 국회 미제출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기존댐 재평가) 그간의 강수패턴, 유입량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
- (수도정비기본계획)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
- (인체에 건강한 물)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필요

□ 핵심성과

- (기존댐 재평가) 댐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준(안) 마련
 - 이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을 객관적 평가하기 위한 기반 마련
- (수도정비기본계획) 지자체·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민·관·학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도정비기본계획(안) 수립 (12월)
- (인체에 건강한 물)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대상지(파주시)내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당초 1%에서 19%로 향상되는 등 신뢰도 향상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 목표치의 보다 적극적 설정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5대강 본류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친수·보전·복원지구로 구분하는 지구지정(안) 등 수계별 하천관리 기본계획 마련
-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(12월), 푸드트럭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(11월)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(12월) 등 제도개선 추진

□ 핵심성과

- 하천구역을 친수(근린, 거점), 보전(특별, 일반), 복원(친수복원, 보전 복원) 지구로 구분하는 '지구지정 작업지침' 마련('14.5월)
- 연구용역을 통해 5대강 하천관리기본계획(초안) 마련('14.9월)하고, 유역관리협의회 등 통해 지자체 협의하여 계획 확정('14.12월)
- 지구지정·관리 기준 마련,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 등 통해 지구지정(안)의 법적 실효성 확보('14.12)
-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(레저시설·편의시설 허가기준 마련, 12월), 푸드트럭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(11월) 등 통해 하천이용을 활성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유역관리 협의회 개최 지연으로 인한 하천관리계획의 확정 지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·일조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갈수기 수질 악화, 녹조 발생시 비상방류 등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 유도
- 관계기관 합동으로 「수질·녹조 대비 댐-보-저수지 운영기준」 마련

□ 핵심성과

- 녹조저감을 위해 댐, 보 등의 비상방류가 가능하도록 가용수량 총 1.3억톤 확보('14.8)
 - (다목적댐) 섬진강수계 목표저수량 대비 0.7억톤 확보
 - (다기능보) 어도제약 수위까지 0.6억톤 확보
- 보 수위조정 및 댐-보 연계운영을 통한 방류 시행
 -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질개선 효과 분석 후 낙동강 구미보, 칠곡보 11백만톤 방류('14.6.28)
- 녹조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(국토·환경·농식품부) T/F 구축 및 운영('14.7.1~11.2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◆ 성과목표 2.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.

1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
 -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*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
- 설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하고, 참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안전역량 평가방안을 마련
 - 발주자, 설계자,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할 및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(안)을 마련

□ 핵심성과

- "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"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(7월)
 -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의 공감대 및 관심을 제고하고, 고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
-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원 발의(9월)로 조속히 제도화 추진
 -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,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안전성 평가 및 안전역량 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의원 발의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지자체에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,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하는 등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
- 도시의 재해취약성 분석 기술지원 및 결과 검토,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등 컨설팅 실시(10개 지자체)

□ 핵심성과

- 국토연구원 등 도시방재 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10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
- 밀착 지원을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홈페이지도 구축(7.22)
-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*을 지자체 등에 안내 하기 위하여 '방재지구 가이드라인' 배포(11.25)
- *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, 구역계 설정, 재해저감대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
- 재해연보, 피해보상대상 등 재해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전국 방재 지구 지정 우선 검토 대상지 제시(12.3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◆ 성과목표 3.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.

1 항공제도 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도 유지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매년 제개정되는 국제기준을 국내 법규에 적기 반영·이행하기 위해 ICAO 평가항목(1,016개)에 대한 진단 및 미비점 개선 추진
- 항공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노선 운항정지 및 과징금 상향 등을 위한 항공법 개정* 추진

□ 핵심성과

- ICAO 상시안전평가(CMA)와 관련, 회의체 운영·교육·워크숍 개최, 자체진단 및 자문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1위 유지
- 항공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헬기분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요 항공안전지표 획기적 개선

-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징금 상향 등 항공법 개정*을 통해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하고 사고·준사고·안전장애 감소

☞ 사고·준사고·안전장애 발생현황(1만 운항횟수당) : '12년 3.65건 → '13년 3.21건 → '14.11월 2.96건

- 또한, 「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」 수립·추진 및 헬기업체에 대한 운항증명 적용 등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헬기사고도 감소

* '11년 3건 → '12년 2건 → '13년 4건 → '14.11월 1건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항공사고를 매년 15%씩 감축, 2017년 세계최고의 안전도 달성('13년 5.4건→'17년 2.7건)을 위한 항공안전종합대책(40개 세부과제) 수립·시행('13.12)
 - * 2014년 목표 : 국적항공사 사고발생 4.6건(백만출발당)
- 8개 국적항공사의 취약분야를 선정·집중관리하고,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·해소하는 등 선제적 사고예방활동 실시

□ 핵심성과

- (항공안전종합대책 추진) 책임경영 정착, 조종사교육 강화 등 40개과제의 이행계획을 확정(1.27)·추진, 항공안전위원회 자문 및 정책방향 점검·보완
 - 항공사 안전조직 강화, 사고유발시 제재 현실화 등 40개과제 중 12개 과제를 종료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 조성
- (위험요인 사전발굴·해소) 시설미흡·이착륙이 어려운 8개공항*을 특수공항으로 추가지정(24, 7.28)하고, 조종사 자격기준신설(12개월내 운항경험) 등 안전관리 강화
 - * 원주, 홍콩, 힐로, 온타리오, 리오데자네이로, 장지아제, 다렌, 리지앙, 현재 24개 공항
- (상시점검·특별점검 실시) 운항·정비분야에 총 2,192회의 상시·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개선이 필요한 713건을 발취, 시정조치 등 개선 완료
 - * 사고·준사고, 항공안전장애 전년대비 대폭감소(사고·준사고 6→1건, 안전장애 116→99건('14.11))
- (제도개선·안전문화 증진) 신규노선 안전검증을 개선(1단계→2단계)하고, 안전증진워크숍을 개최(411, 6.24, 7.17)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 조치로 항공안전 증진
- (조종사교육 내실화)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비정상접근·수동착륙훈련 강화, 맞춤형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도입 등 조종사교육훈련 내실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위험물질 운송 소과정을 실시간 추적·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·정확한 대응·방재 도모

□ 핵심성과

- 「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(13.7, 국조실 주관)」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며, 국조실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정상 추진
-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
 - 운송차량에 대한 경로안내, 차량상태 및 사고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
 - 오류 검증 등 실용화를 위해 개발 단말기를 운송차량 300여 대에 부착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사업 수행
- 위험물질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대해 언론사 팸투어 등 홍보로 방송 3사, 연합 등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
- 위험물질 운송 추적관리 정보망 구축·운영 법적 근거 마련
 -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·정확한 대응·방재를 지원하는 실시간 추적·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교통사고 원인별 주요 테마를 설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
 -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모의실험결과* 주요 방송상 메인뉴스 등에 보도하는 기획보도와 설·명절, 행락철 등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
-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교통안전 체험형 교육의 확대 시행을 위한 수도권(경기 화성)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공사 착공('14.6)
-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자동으로 차량위치 등을 자동 전송하는 Emergency-Call 시스템 구축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국민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조성을 유도
 - 교통안전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역대 최초로 4,800명 수준을 달성 예상
- 교통안전체험교육,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강화(약 8만대 분석)로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
 - '14. 11월말 기준 20,543명('13년 대비 18% 증가) 교육, 이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(11월 전년대비 5.2% 감소)의 요인으로 작용
-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위치 등을 관계 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Emergency-Call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설치의무자 의무이행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, 저시정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능기준 개선, 지자체 이관개소에 대한 전수조사, 신고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On-Line 신고시스템 구축

□ 핵심성과

- 표시등에 대한 검사·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현장검사 업무 등에 대한 위탁범위 결정 및 수탁기관 선정(11.13)
-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설치된 표시등에 대한 작동·관리상태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명예감시원제 시행(10월~)
- 지자체 이관개소(871개소)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(7월)하고, 한국 전력 설치개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(9월)
- 표시등 설치·신고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On-Line 신고시스템 구축 완료(11.28) 및 시험운용(12월~), 운용개시('15.1월)
- 한전 송전탑에 설치된 고광도 장애등의 설치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·조치방안 마련(12월)
- 표시등 성능개선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설치기준 보완(12월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도로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대형화 추세 및 노후화 진행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
 - 터널·교량 등 시설물의 붕괴, 화재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초동대응체계 확립 필요
-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과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율성 미흡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, 대책마련 시급
- 또한,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시설 측면의 위해요소를 제거(위험도로개선, 사고찾은곳 개선, 보도설치)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

□ 핵심성과

- (재난안전체계 구축) 터널화재, 붕괴 등 주요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초동대응체계 확립 및 도로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
 - * 반복적 훈련과 불시점검(총 97회), 교량·터널·사면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
- (과적근절대책 추진) 단속방식 개선, 벌칙강화, 발생원인 차단 및 제도개선 등 화물차량 과적행위 근절대책 마련
- (교통안전 개선) 위험도로 개선사업·사고찾은곳 개선사업·보도 설치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위해요인을 제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철도안전관리체계 개편, 철도용품 검증 강화, 제2차 철도안전종합 계획 변경 등 선제적·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철도안전 강화
- “선제적·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철도안전 강화”과제내용에 “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” 추가 시행

□ 핵심성과

- 상시적·예방적 철도안전관리체제로 개편·시행(‘14.3월~)
 -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“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”를 본격 시행(‘14.3월~),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검사 시행지침·기술기준을 제정 완료
- 정부의 철도안전감독 조직·인력 대폭 보강
 - 철도안전정책관 신설(‘14.12월)로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정부의 철도 안전전담조직을 정규화하여, 정부 관리·감독 역량을 강화
- 노후·철도시설 개량사업 확대 시행
 - 철도 노후·취약시설, 내구연한 경과한 전기·신호설비 교체 등 ‘15년 철도안전예산 대폭 확대 반영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기본안전수칙 법제화, 안전문화 확산, 이중 안전장치 보강 등 안전 관리수단 강화를 지속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교통량 지속증가*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을 최적으로 관리하고, 비상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「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」 구축 추진

* 최근 5년간 연평균 6.5% 증가('09년 1,247→'13년 1,603)로 연간 약 1,258억원의 항공기 지연운항 비용 발생

- 항공기 운항 상황의 종합 통제·관리, 최적의 공역관리시스템 및 비정상상황 발생시 관계기관간 적기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

□ 핵심성과

-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(31명) 및 외부자문단(9명)을 구성('14.5)하여 사업 진행상황 지속 점검
-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항공실내 항공통제센터사업팀 직제 반영*(7명) 및 운영('14.9), 실시설계 완료('14.12)
-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·운영에 대비하여 중국, 일본 등 인접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

* 제9차 한·일 항공교통관제회의(7.2), 제5차 한·중 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에서 통제센터 구축현황 설명 및 인접 ACC간 상호협력 방안 등 논의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맞추어 관제업무 취약분야를 선정·집중점검하고,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
- 항공 선진국과 감독·안전관리 분야 우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, 관제안전 확보를 위해 민·군 안전협업도 확대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취약분야·기관 집중점검*을 통해 관제탑 시설·근무환경 및 교육 훈련팀 운영 개선, 위험요소 분석·관리를 위한 안전장애 DB 구축
- 한·미 협력회의, 세미나, 美 관제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양국 간 항행안전감독·안전관리체계 등 비교·분석, 안전관리 정보공유
 - 특히, 미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부인으로는 최초로 우리 감독관이 美 관제시설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 실시(11.2~7)
- 공군과의 협업을 통해 민·군 공용공항의 안전관리 강화*, 해군과도 체계적인 관제분야 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합의서 체결(12.29)

□ 개선 및 보완사항

- 관제분야 장애 분석 툴 및 DB 구축 관련 개발방향 변경(자체개발→ 既 운영 중인 통합항공정보시스템과 연동)으로 일부 업무일정 지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LG전자 헬기 사고('13.11.16) 등을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「헬기안전대책*」을 수립('13.12월) · 시행

* 헬기 분야의 안전제도 · 인프라 등의 전면 개편을 위해 20개의 개선과제 마련

- 헬기 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(AOC)* 도입, 악기상 시(시정 1,500m 미만) 운항 제한 및 헬기 전용 운항안전기준 마련 등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헬기 사용사업자 대상 운항증명 제도 도입을 위해 항공법 개정(5.28) 및 시행규칙 개정(11.29) 완료**
- 시정 1,500m 미만 악기상 시 헬기 운항제한을 위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(제184조의3 특별시계비행, 7.15) 완료
- 대형 운송용 항공기 위주의 운항기준을 사업별(운송사업 · 일반항공 · 사용사업용)로 전면 개편하여 헬기 전용 운항기준 신규 마련(10.31)
-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산 및 전북소방항공대 대상 헬기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(11.4~11.11)하여 안전미흡 사항 발취 및 개선지도 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첨단화된 초대형 항공기 신규 도입, 북극항로 운항 등에 따라 최신 비행지식 및 조종기량 향상을 위해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고도화

□ 핵심성과

- 7개 국적항공사 소속 조종사를 대상으로 운항자격심사 실시(상반기 총 701회) 및 결과를 분석(7.31)하여 업무에 피드백
 - * 전체 조종사의 불합격률은 2.7%(19건)로 전년 동기대비 0.5%(19건, 2.2%) 증가
- 운항자격심사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표준화 등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(고시) 개정(8.1)
 - * (주요개정 내용)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기간 강화 및 자격요건 정비 및 조종사 기량심사 방법 구체화 등
- 그간 정부 운항자격심사에서 제외됐던 일반기장에 대하여 지식, 기량향상 및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특별 수시심사 실시(5월, 11월)
 - * 총 103명 조종사에 대하여 343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향후 조종사 훈련시 참고토록 항공사로 통보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일반기장 수시심사 시 지적 사항은 비행지식 및 기량 향상 등을 위한 조종사 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에 통보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추진배경) 헬기, 소형기 및 경량 비행장치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
 -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(SBAS)* 구축 및 쏘 국토 서비스 제공으로 소형항공기 정밀위치정보 확보 및 감시강화
- (주요내용) 보급형 항공 내비게이션(Air-Navi) 개발과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등 저고도 시계비행 안전운항 지원체계 구축

□ 핵심성과

- 차세대 항공감시 멀티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기본설계 준공('14.8)
-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(SBAS) 개발구축 사업단 구성('14.10)
 - 사업단 : 항공우주연구원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)
 - * (기간) '14.10.30-'15.6.29(8개월), (금액) 5,767,000천원(정부출연금)
- 차세대 항공감시 멀티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추진(발주, '14.11)
 - 군 항공작전사령부 등 관계기관, 항공협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(12.13)
 - * (사업기간) '14.11.25-'15.9.20(300일), (금액) 940,000,000천원 (계약자) 문엔지니어링 외1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고령자의 인지·신체능력 저하를 고려한 야간 시인성 증진 방안, 교차로 설계방안 등 구체적인 "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" 마련

□ 핵심성과

-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자 설문조사(10.10)
 - 고령보행자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편리성/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방안 도출
-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현황조사(11.18)
 - * 청학노인문화센터, 인천중구노인복지관, 일산노인복지관 등 조사
-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자료 교통안전공단 협의(고령자 사고 GIS 분석 요청)
- 고령자를 위한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방침(12.24)
- 고령자를 위한 설계가이드라인 관련기관 배포(12.3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일부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일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성과목표치도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사고·고장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긴급견인 서비스의 활성화는 2차사고 예방의 가장 실질적 효과를 발휘
-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2개 이상의 민자고속도로에도 긴급견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콜센터 고객 응대 매뉴얼 정비(예상 Q&A, 응대 TIP 등 보완)(13.11월)
- 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 들오공사) 연결시 긴급견인 신청 “자동 ARS 안내 및 연계시스템”을 구축(14.5월)
- 10개 민자법인이 참석한 4차례의 전체 회의(3.17, 4.18, 5.28, 7.23)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·설득하여 전체 10개 민자법인과 합의 도출
- 스마트폰 앱에 “긴급견인 간편 신청” 버튼을 신설(14.1월~)
-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‘긴급견인 서비스’를 운영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전체로 확대 시행(14.9.1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확대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고속도로·국도·지방도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고전화 또는 일부 앱을 운영 중이나
 - 도로 민원사항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,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와 도로운영 정책으로의 환류가 어려움에 따라
 - 교통사고, 고장차량 신고 등 단순 상황제보에서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 시행 및 정책반영을 위한 모바일 대응체계 마련

□ 핵심성과

- 서비스 시행('14.3) 후 12월말까지 9개월간 7,098건의 불편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었음
 -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도입으로 도로이용 불편신고에 따른 신속한 도로보수가 이루어지는 등 선순환체계 구축
- 우수 신고사례 포상(매월), 성과를 공유회('14.11) 등을 통해 도로관리 기관간 신고 및 처리 사례 공유
- 스마트폰 내비게이션(KT)과의 연계, 경찰청 '교통알림e 앱'과의 연계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('14.1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도로이용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졸음쉼터) 장시간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 피로 해소,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공간 설치필요

* 졸음운전은 전체 교통사고의 30%, 치사율은 일반교통사고의 4.5배

- (산사태 위험지구 정비) 집중호우,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 지역 도로변에 토석류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졸음쉼터) 고속도로 및 국도에 졸음쉼터 29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4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완료

-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올바른 졸음쉼터 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언론보도 자료 배포(11.28)

- (산사태 위험지구 정비) 고속도로 및 국도변 토석류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등 추진

-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도변 산사태 위험지구 66개소를 조사하고, 이 중 관리구간 59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방안 마련하고, 고속도로변 31개소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

-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조사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상하수도관·가스관 등 지하매설시설물을 관리주체별로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잦은 굴착으로 도로이용자 불편 초래, 체계적 관리 필요

* 신설·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은 3년(보도는 2년) 내에는 도로 굴착공사를 할 수 없음(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)

□ 핵심성과

-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(14.7.15 도로법시행령 개정, 제56조제7항)

- 도로굴착 횟수 조정을 위해 굴착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중기계획(5년 단위)을 수립토록 하고 동시 또는 유사시기에 굴착토록 유도

- 지자체 담당자 합동교육, 국토관리청 공무원 집합교육, 굴착사업자 회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수차례 협의 진행
- 이중 굴착 방지 및 유사시기 조정으로 비용 절감, 사업기간 단축 등 제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굴착공사 시행사의 중기굴착계획 수립 확인 조속 시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고속도로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2차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자 행동요령 숙지 등 전방위적 홍보 시행
- 최신장비,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
- 2차사고예방 안전장비 보급 확대 및 '안전도우미' 창설·운영

□ 핵심성과

- 외국의 국토 장기전망 및 계획수립 사례검토('14.3.31)
- (2504 긴급견인서비스) 실적 약 3.2배 증가(13년 2,740건 → 14.11월 11,568건)
 - 국정홍보, VMS,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이용편의 향상
- (법·제도 개선) 자동차판매업소, 정비업소 등의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·양수 시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
- (안전도우미) 위급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도와주는 제도 시행으로 시민참여 활성화(국토부·도공 등 총 1700여명 참여)
 - 사고발생시 도로 밖 대피 안내, 후방 안전관리 등 2차사고 예방 활동 전개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신호기 시인성 개선) 기관사의 신호착오 등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보조신호기 설치(441개) 등 안전설비 보강 추진
- (안전시설 개선) 노후·취약시설 개량, 스크린도어 설치(9개역), 건널목 차단시설 개량 및 입체교차로 사업(8곳) 등 추진
- (철도 방범 인프라 강화) 주요역 CCTV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광주철도범죄수사센터 구축('14,11)

□ 핵심성과

- 노후·철도시설 개량사업 확대 시행
 - 철도 노후·취약시설, 내구연한 경과한 전기·신호설비 교체 등 '15년 철도안전예산 대폭 확대 반영
 - 보조신호기(441개), 스크린도어(9개역), 선로변 안전울타리(290개소, 92km) 등 철도안전 시설개량사업 완료
- 교량 내진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등 국가재정 3,050억원을 투입하여 철도 노후시설 개량도 착실하게 추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일반철도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'15년도에는 '14년 투자예산(2,600억) 보다 61.3% 증액하여 4,194억원 투자 계획

【전략목표 V】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한다.

◆ 성과목표 1. 교통혼잡을 완화한다.

1 대중교통 활성화

(1) 평가결과

과제 주요내용

- (전국호환 교통카드)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통해 지역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
- (간선급행버스) BRT의 정시성·고속성 등 도입효과 구현을 위해 우선 통행·재정지원·인허가 의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제정
- (대중교통전용지구) 혼잡한 도심의 교통문제와 상권침체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사업으로,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조성

핵심성과

- (전국호환 교통카드) '14. 6월 전국호환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하고, 전국 대부분 지역('97.3%)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완료('14년 11월)
- (간선급행버스) 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('14.12.4 시행)·시행규칙('14.12.10 시행) 제정
- (대중교통전용지구) 정상 추진하여 대중교통이용, 토지이용활성화 도모
 - 지속·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을 대화와 설득*으로 계획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('14년 12월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M-버스 제도를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, 시·도지사에게 노선 신청권 부여 등 제도 개선(여객법 하위법령 개정)
 - 차별화된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요금을 조정하고, 정류소에서 잔여좌석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

□ 핵심성과

- (방침결정)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, 시·도지사 노선 신설 신청권 부여, 비침두 시간 탄력운행·차등요금제 도입 검토 등(3.17)
- (입법예고) 방침결정에 따라 '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' 등에 대한 여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(5.23~6.17)
- (요금조정) 광역급행버스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부합 및 원가 보상 수준의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(11.10~12.9), 기재부협의(12월)
- (노선신설 등)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(인천-합정, 8.1. 운행개시) 및 추가 공급력 확대(71개 노선, 269대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법령 개정 등 주요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일정관리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신호교차로에서 접속도로에 교통이 없는데도 주도로 직진교통은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차량 지·정체 및 신호위반 사례 등 발생
 - 국도상 신호교차로 교통소통 및 안전 개선을 위해 교차로 신호 체계(현시, 주기 등) 조정 필요
-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방향별 교통을 감지하여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감응신호체계 도입

□ 핵심성과

- 경찰청 협업을 통해 “도로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 도입추진계획”을 국무회의(VIP, 7.22)에 보고하는 등 감응신호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
 - 국도상에 시범사업*을 시행하여 기본계획을 마련('14.12)하고 '15년 신규예산(25억)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적용 추진
 - * (시범사업) 2개소 : 국도43호 화성시 구간, 국도87호 포천시 구간 (각 2.0km)
 - 감응신호체계의 도입 및 효과를 홍보(7.22)하고, 교통 및 신호 등 전문가 자문시행(10.8)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(10.17) 등 의견 수렴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보다 많은 구간에 대한 검토 및 설치를 통해 성과 확산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서해안선 서해대교 및 경부선 천안 이후의 상습적 정체 해소를 위해 대체 고속도로 건설
- 수도권 '사가정-암사' 등 도시부 혼잡도로 6개 구간을 준공*하고, 2개 구간을 착수**하여 도시부 혼잡개선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적격성 조사 완료) B/C 1.18로 경제성이 확보되고 민자 추진시 정부부담이 626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(11.10)
- 광역·혼잡도로 설계착수(2건) / 준공 및 부분개통(5건), 우리부 · 지자체 · 관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개선방향 논의
 - (착수) 대림육교-경산시계 실시설계('14.2), 태릉-구리 설계('14.12)
 - (준공) 상·하반기 준공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여월택지-남부순환로('14.5), 신천좌안도로('14.5), 장유신문-강서가락('14.12) 적기 준공 및 지역 교통혼잡 해소
 - (개통) 하반기 준공 및 개통사업 지자체 회의 및 현장점검* 등을 통해 사가정-암사('14.12), 대전별곡길('14.12) 부분개통으로 시급한 교통혼잡구간 해소**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혼잡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재정집행 방식 관련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고속도로 건설) '14년 음성-충주(신설18.0km) 및 냉정-부산(확장53.5km) 2개 노선을 준공하고, '15년 성산-담양(공약), 충주-제천 등 5개 노선 준공, 광주순환 등 4개 노선 발주, 화도-양평 등 15개 노선 계속 추진
- (정체구간 관리) '14년 경부선 남사-안성 등 3개 구간 갓길차로 설치 및 주요 정체구간 고속도로 진입로 신호조절 시스템 운영, 냉정-부산 등 정체구간 확장 개통

□ 핵심성과

- (고속도로 건설) 신규 착수(5개 노선), 개통 (2개 노선)
 - (신규착수) 밀양-울산, 대구순환, 화도-양평, 성서-지천, 평택-서평택 (107.4km)
 - * 밀양-울산 : 45.2km('14.3) / * 대구순환 : 21.6km('14.3)
 - * 화도-양평 : 17.6km('14.5) / * 성서-지천 : 12.7km('14.5)
 - * 평택-서평택 : 10.3km('14.10)
 - (개 통) 음성-충주(충주-동충주), 냉정-부산 개통(71.5km)
- (정체구간 관리) 정체구간 256km 목표치 달성(280→250km, 30km 감소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주요 추진 일정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관리 강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차량 네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등 자동차 이동체적 정보를 수집, 지역·시간대별 교통혼잡지도 제작
 - 도로 혼잡지표를 현행 고속도로·국도위주에서 지방도·국지도 및 도시내부 도로·교차로를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생성
- 혼잡비용 등 교통정책 지표 및 효과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하여 교통수요관리, SOC 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에 활용

□ 핵심성과

- 교통빅데이터 분석·처리기술을 이용한 교통혼잡지도 작성 및 혼잡지도 생성방안 세미나 개최(2.21)
- 교통혼잡지도 웹북 서비스 개시(7.1)
- 네비게이션 차량이동체적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·도로별·시간대별 장래 교통혼잡 예보를 위한 방법론 개발(12.15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첨단IT기술을 활용한 교통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민간 교통정보 확보 방안 마련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)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단위부담금을 인상하고, 교통유발량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(주차정책 개선) 도심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국민불편 초래되므로, 주차문제 개선대책 마련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)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 재산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·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교통유발계수 제도 개선(안)* 마련
- (주차정책 개선)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개선방안」 마련('14. 9월), 주차관련 규제완화 추진('14. 12월)
 - 주차전용건축물 입점 시설 기준 및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등 주차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('14. 12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) 재산정시 계수변화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 보완 조사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로 대상 반영,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기 설치된 회전교차로 문제점을 발굴을 통한 지침 개정

□ 핵심성과

- 관련기관 간 협업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을 통해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 -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단계에서부터 회전교차로 적용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발굴하여 반영
 - * 8개 사업, 15개소 : 국도 40호선 덕산교차로, 국지도 68호선 웅천교차로 등
 - 회전교차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 실시, 운전면허 필기시험과목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(회전차로 내 주행차량이 우선권) 반영 및 교육기관 홍보영상물 상영 요청(6.27)
-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방침(12.24)
-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계기관 통보(12.3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속도저감시설로 적극 활용 등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확대 보급 및 기술 지원(워크숍), 관계기관 공조 등 회전교차로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전국 포장도로의 15.8%(13,458km)에 ITS를 구축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추진
 - 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 소요시간 안내 시범 서비스 실시
- 교통관리는 물론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ITS(C-ITS)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
 - 스마트하이웨이 등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사고예방 기술에 대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을 통한 종합검증과 보완 추진

□ 핵심성과

-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 마련(국무회의('14.8), MOU체결('14.10))
- 우회도로 안내 서비스 구간 확대 등 개선안 마련('14.12.19)
- 첨단 ITS 실증시험을 위한 통신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완료(6.23), 공개시연 실시(9.16~18), 관련 기술검증 완료 및 성과발표회(12.19)
- 차세대ITS 시범사업 착수(대전~세종 등 81km, 7.18)
- '15년 지자체 ITS 대상구간 평가회의 개최(8.28) 및 선정 완료(9.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차세대ITS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전용주파수 확보 및 관련 법·제도 정비 필요

◆ 성과목표 2.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한다.

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 중
- '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'(14.7)에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한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 대상과제로 선정

□ 핵심성과

- (기본계획 수립 착수) 과업 수행자 선정 절차*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'14.6.30일부터 A노선 기본계획 수립 및 B·C노선 재기획 용역 착수
- (자문체계 마련) 총괄기획가 및 자문단, 우리부 TF로 구성된 총괄체계를 구성('14.9월 장관 방침결정)하여 본격 운영('14.12~)
- (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실시) 사업계획 수립·보완을 위해 총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, 의원 면담, 관계기관 협의, TF회의 등을 실시
- (사업계획 수립) A노선의 기본계획 수립, B·C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부문별 검토를 진행 중('14.6~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간선철도망을 적기에 확충, 철도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여 철도수송 부담률 제고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추진
- KTX의 수혜지역을 포항까지 확대하기 위해 울산-포항(신경주-포항) 복선전철 사업 추진
- 주요 간선철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해 중앙선(도담~안동), 중부내륙선(이천~충주) 철도 건설사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KTX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국민편의 및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**신경주~포항(38.7km) KTX 직결사업 '14.11월 완공 목표 달성('15.3월 개통 계획)**
- 일반철도를 **고속화(200km/h이상)**하여 속도 경쟁력 확보하고 철도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철도서비스 조기 제공을 위해 **도담-안동 등 2건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하여 목표 달성**

* 착공사업(2건) : 이천-문경(이천-충주), 도담-영천(도담-안동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 추진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철도망 확충
-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도시교통 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망 확충

□ 핵심성과

-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적기 확충
 - 용산~공덕 구간(용산~문산 복선전철) 영업운행 개시('14.12)를 통해 경의선과 중앙선을 연결, 환승없이 서울 서북부와 경기 동부권을 2시간대 연결
 -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통해, 별내선 복선전철(서울8호선 암사~구리~남양주간 광역철도) 기본계획 적기 고시('14.12)
-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철도망 적기 확충
 -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대구 3호선 사업을 계획 기간내 공사 완료(서울9호선 영업시운전·대구3호선 공사완료, '14.1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노후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함께 관련 정부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협의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당초 서울역↔인천공항간 KTX 직결운행이 불가하여 공항철도 이용 시에는 환승에 따른 불편 초래
- 이용객 편의제고, 공항철도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KTX 직결 운행 등 '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인천공항 KTX 개통(6.30) 및 정상운행
- 인천공항철도 KTX 수송실적(일평균, 승하차기준)
 - 평균 이용객수(6~11월) : 2,044명/일
 - 최대 이용월(7월) : 2,523명/일, 최저 이용월(11월) : 1,814명/일
- 인천공항철도 KTX 수송실적 분석
 - (수송실적) 6.30. 개통 이후 5개월간 이용객수는 연말까지의 목표치인 일평균 이용객수 1,000명 대비 204.4% 수준인 2,044명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보다 많은 이용 활성화를 수요조사 및 연계활용 방안 검토 필요

◆ 성과목표 3. 교통 SOC 투자를 활성화 한다.

1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지역의 철도사업 요구에 대응하고, 동시에 투자우선순위 정립 등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장기 철도정책방향 정립
-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('16~'25)을 수립('14.12, 초안마련 및 공청회 개최)

□ 핵심성과

-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T·F 및 자문단 운영
 - 자문회의 및 TF회의 2회(8.13,9.30), 공정 점검회의 총 10회 개최(7.14, 7.22, 7.30, 8.22, 10.21, 11.14, 11.25, 12.9, 12.15, 12.19)
-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(1차 6.5~6.27, 추가~11.30), 간담회(16개 시·도, 10.16)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협의(12.29~)
-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(12.29)
 -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담은 자료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시·도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 제고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사전 갈등관리를 지속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SOC 고령화에 대비하여 SOC 생애주기 유지관리전략을 수립하고, SOC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SOC 유지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부처협의를 마련하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
-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사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확대 및 보수·보강 지원
 - 소규모터널 등을 포함하는 시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MOU 체결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과제 점검회의(7.11)를 통해 부처협의를 마련하고, SOC 고령화에 대비한 '성능중심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계획'을 수립(11.25)
 - 노후 SOC의 수명 연장을 유도하고 경제·사회적 비용절감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방향 확정
- 소규모시설의 2중 시설물 확대를 위한 시특법 시행령 개정 완료(14.7)
-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보수보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(14.3) 하고, 협약기관 운영위를 개최하여(14.9) 지원대상 20개소 확정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VE(시공단계)를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 추진
 - 공사 중 총공사비 증가 10%이상 발생시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종별 공사비 10%이상 증가시 VE 시행 추가
- 설계VE(시공단계) 시범사업 시행 및 평가
 - 설계VE(시공단계)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검토

□ 핵심성과

- 시공단계의 설계VE 시행계획('14년도) 시범사업 선정
- 시공단계 설계VE 시행 의무화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
 - * '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'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78호('14. 5)
- 시공단계 설계VE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('14.12)
- 시공단계 설계 VE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('14.12)
- 관련지침 개정 등 활성화 노력으로 '14년 시공VE 시행 결과 6개 기관 66건/1,254억원 절감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기초자료 신뢰도 향상) ITS 등 교통량 조사지점 데이터* 활용 제고,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포함한 대중교통 수요예측 모델 개선
- (교통정보 종합관리) 지자체·공공기관·연구기관 등에서 수집하는 교통량·속도 정보를 국가교통DB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
- (사후평가 강화) 국가교통DB 활용, 완공된 사업의 수요 등 사후 평가를 통해 DB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

□ 핵심성과

- 교통SOC 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 기초자료가 되는 국가교통DB의 개선 방안 등 마련
 - 교통량 관측지점 확대(377개→1,238개)를 통해 신뢰도 개선
 - 지자체·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교통량·속도 정보 등을 국가교통DB에서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보 종합관리 방안 마련(9.30)
 - 국가교통DB 활용, 완공된 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국가교통DB 개선방안 마련(12.17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업 순 단계에 걸쳐 개발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수요예측 변화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SOC사업 투자 감소 전망에 따라, 사업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비효율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
- ☞ 추진 중인 사업도 중간점검을 강화*하고,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 관리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총사업비 증액 최소화 (12.8% 절감)
 - '14년 11월말 기준, 총사업비 조정 요청사업에 대하여 투심에서 사전검토 한 결과 요구액 대비 약 12.8%절감(물가, 낙찰차액 제외)
- 중간점검 강화 (15건)
 - (예타 신청 시) '14년 하반기 예타 신청 대상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 재기획 및 조정 요청
 - (공사비 신규 요구 시) '15년도 신규 공사비 요구사업 중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, 1개 사업 규모 조정 심의
 - (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) '고속국도 제400호선 건설공사' 등 3개 사업에 대해 재설계 등 보완 요구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'15년에도 성과가 확산될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발전 방향 검토 필요

◆ 성과목표 4. 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.

1 자동차 매매·정비사업 투명성 제고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중고차가 연간 330만대(13년) 거래되는 등 중고차 매매-정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판매업자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매매업 환경 조성 필요
- (중고차 이력정보 공개) 「자동차토탈이력정보시스템」을 통해 인터넷·모바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사고·수리내역 등 주요정보 공개
- (매매업자 보증 책임강화) 중고차의 하자발생시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로 이원화된 성능·상태점검 책임*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

□ 핵심성과

- 중고차 매매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(2.3)
- 토탈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'14년 총 106천명에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*
- 자동차 부품가격 및 정비요금(공임·정비시간) 공개방안 마련 추진
- 정비업체 사업장에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 게시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4.10), 정비요금 게시 시범사업 실시
- 매매업자의 성능·상태점검 책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매매업자의 하자보상보험 가입 시범사업 추진기반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정확한 연비 측정을 위해 산출기준에 자동차의 주행저항값 검증 및 신개발 자동차(수소연료전지차 등)의 측정 기준을 마련
- 국내 시판중인 자동차에 대한 연비 적합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개(부적합시)

□ 핵심성과

-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(연비) 계획 방침(1.21) 연비조사 시행
- 연비 사후관리 기준 통일화 및 사후관리 부처 일원화 확정(국가정책 조정회의, 6.26)
- 연비조사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'14년 조사대상인 크루즈의 연비 부적합에 대해 자발적 신고(10.24), 사실공개·소비자 보상 발표(11.3)
- 우리부·국조실·산업부·환경부 합동으로 '자동차 연비 공동고시'를 마련하여 공포·시행('14.11.20)
- 공동고시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해소
- 아울러, 앞으로 주행저항검증이 의무화되는 등 연비 조사가 엄격해 지고, 휘발유차 연비는 실제 연료 특성을 반영한 계산식 도입으로 체감연비에 근접하게 되었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교통사고 중증환자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집중 재활치료(1일 최대 8시간)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(304병상)
-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정부보장 보상내용을 우편·유선으로 안내하는 '찾아가는 보상서비스'를 확대 실시(3,610 → 4,500명)
-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확대(현행대비 50% 이상 인상)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
- 공제조합별 자체혁신방안 마련, 운수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·협의하여 공제제도 종합혁신 대책 수립

□ 핵심성과

- 양평 재활병원 건축물을 준공(6.18)하여 진료개시(10.1)하였으며, 서울성모병원에서 5년간 위탁 운영중
- 무보험·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 중 미보상자 4,579명('12년도 사고 대상)에게 보상절차 및 방법 등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안내
- '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'을 개정하여 책임보험보상한도를 1.5배 수준(사망·후유장에서 1억5천만원, 부상시 3천만원)으로 인상
- '자동차공제 혁신방안' 마련(4.7)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(6.9)하였으며, 금감원·공제민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(9.22~10.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재활병원은 현재 개원초기단계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, 공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 이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위수탁 차주보호)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침해 등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화물차주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- (부당 영업행위 처벌 강화) 구난형 화물자동차(일명 레커차)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불법 리베이트 행위*근절을 위해,
- (화물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) 화물운전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 실시, 영세 운전자를 위한 화물정보망 구축 운영,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건설 지원

□ 핵심성과

- 양수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보호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완료(5.28 공포, 11.29 시행)
- 구난형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불법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완료('14.12.9 본회의 통과)
- 화물운전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(49억원) 시행 및 법률구조사업 등 추가사업 발굴(7.3, 화물복지재단 정관 개정)
- 영세 화물운전자에게 화물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화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무료 화물정보망 서비스 “화물나누리” 실시(4.1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제도개선)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, 범칙금 등이 지속 전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“자동차 운행정지 명령”을 도입하고 대상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단속근거 마련
- (단속강화) 공무원용 실시간 대포차 단속앱(스파이더앱)을 확대 배포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음주단속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시 대포차도 공동단속 실시('14.5, '14.10)

□ 핵심성과

- 대포차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
 -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입법추진('14.6.19, 임내현의원 대표발의)
 - 폐업법인,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의 자동차를 직권말소를 통해 운전자 처벌,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도입 규정 신설 등 입법추진('14.6.19, 임내현의원 대표발의)
- 대포차량 단속강화
 - 대포차 근절 및 단속 추진계획 방침결정(3.12) 및 대포차 의심차량 1,500대 전수조사, 유관기관과 공동단속 실시('14.4월~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대포차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정보를 안내(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)하고 있어 다양한 통보 수단(인터넷 홈페이지, 휴대폰 문자 등) 마련이 필요
- 자동차 검사시 공단 검사소에서도 현장정비가 가능토록 제도개선

□ 핵심성과

- 자동차 소유자에 리콜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통보수단 다양화
 - 리콜 보도자료 배포 시 리콜알리미 서비스 홍보('14.4~)
 -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리콜정보 안내(6.1)
 -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에 리콜알리미 홍보물을 동봉하여 배포('14.8~)
- 공단 검사소에 민간 정비업체가 입주하거나 출장정비 등을 통해 불합격·개선권고 차량에 대한 현장정비가 가능토록 추진
 -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고객(300명)을 대상으로 '자동차 정기검사 만족도' 설문조사('14.1.14~18, 5일간) 실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노력을 강화할 필요

◆ 성과목표 5.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혀 나간다.

1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민자사업 초기의 높은 수익률, 부실수요예측, 경쟁부족 및 총사업비 과다 문제는 제도개선, 협상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,
 - 현재 운영 중인 초기사업의 높은 통행료와 MRG 재정부담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재구조화 추진 착수
- 통행료 인하 및 MRG 축소를 위해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금년 중 2개 사업에 대해 협의완료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서수원-평택 민자도로사업 변경협약을 체결(10.22)하고, 용인-서울은 협약 변경 합의서 체결(12.30), 평택-시흥은 실무협상 완료(12.30)
 - 서수원-평택 : 통행료 17% 인하, 통행료 인상 제한(3년 주기 통행료 조정 및 한도 설정), MRG 폐지 등(사업자는 통행료 9.4% 인하만 제안)
 - 용인-서울 : 통행료 8.1% 인하, 2~5종 통행료 인상 제한, MRG 폐지 재협의,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 미지급(사업자는 통행료 1.7% 인하만 제안)
 - 평택-시흥 : 통행료 9.5% 인하(사업자는 통행료 1.7% 인하만 제안)
- ☞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약 1조 5,500억원 경감(서수원-평택 9,600, 평택-시흥 3,500, 용인-서울 2,400), MRG 폐지로 재정부담 위험 해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항공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승객 탑승편의 증진 및 업계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인천발 호주행 및 김해발 미국행 승객 2차검색 폐지 추진
- 항공사-공항운영자간 승객운송정보 공유기반 마련을 통해 e-탑승권* 소지 승객의 종이탑승권 교환절차 생략 추진

* e-탑승권은 웹 체크인을 완료한 사람이 일반용지에 출력한 탑승권을 의미

□ 핵심성과

- 미국·호주정부에 항공기 탑승구 앞 액체류 2차검색 폐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 2차검색 폐지 시행
 - 미국정부와 2차검색 폐지 합의(5.22), 김해공항 액체폭발물탐지 시스템 구축(10.27)·시범운영(11.20~12.14), 2차검색 폐지 시행(12.22)
 - 인천공항 호주행 2차검색 폐지 제안(1.27), 한-호주 양자회의(7.1), 호주정부와 2차검색 폐지 합의(12.2), 2차검색 폐지 시행*(12.8)
- 항공사-공항운영자간 승객정보 공유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e-탑승권 승객의 종이탑승권 교환절차 생략 시행
 -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·공포(4.4), 법무부·관세청·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의(4.23, 11.27), 공항공사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(11월말), 시범운영 및 종이탑승권 교환절차 생략 시행(12.2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분기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의·참여와 지속적인 추진일정 관리 등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알뜰주유소 유가 인하)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
- (휴게소 배후지 개발)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 휴식기능에서 물류·관광, 쇼핑, 문화체험 등 복잡·다변화된 이용자 요구 부응 필요
- (국도변 유희부지 활용)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특산물 판매소 등의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미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

□ 핵심성과

- (알뜰주유소 유가 인하) 셀프주유기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제각각 기름을 구매했던 시스템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(휴게소 배후지 개발)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 휴식공간에서 물류·관광, 쇼핑, 문화체험 등 이용자 요구 충족 공간*으로 변화
- (국도변 유희부지 활용) 각 지방청별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,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하고 연내 시범사업 추진(3개소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도서지역)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**울릉도/흑산도 소형공항개발 추진**
- (지방거점공항) 항공수요 대처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한 **시설개선 추진**
 - * (김포공항)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(공정 30% 달성, '16 완료)
 - * (김해공항)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추진(공정 15% 달성, '17 완료)
 - * (제주공항)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여객터미널 대합실 등 시설개선 추진
 - * (청주공항)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통 및 「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재기획조사」 용역을 통해 청주공항 중장기적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

□ 핵심성과

- (도서지역) 울릉/흑산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시행('14. 4~'15. 4)
- (지방거점공항)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공사 착공,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착공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
 - (김포공항) 국내선 리모델링 공사 착공(6.10), 종합 공정을 15%를 달성
 - (김해공항)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착공(5.30), 공정률 30% 달성
 - (청주공항) 북측 진입도로를 조기에 개통('14. 9→'14. 6월)하고 “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재기획조사” 연구용역을 적기 완료(12.4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항공교통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, 외국항공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,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등을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외국항공사 이용자 보호) 항공사 신규취항 허가 사전점검표 및 외항사 피해구제창구 설치 의무화 관련 항공법 개정안 발의(10월)
- (항공사 부당행위 개선) 항공사의 환불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피해다발 항공사 리스트 대국민 공개 실시
- (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* 시행) 항공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·점검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추진
- (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) 부과방식의 합리성 제고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주요내용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(14.12)
- (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방안 도출) 항공사 안전성 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평가지표 수정 등 운수권 규칙 개정(안) 검토(14.9~11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충분한 법률검토 및 전문가,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 추진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) 지속가능성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 실시
 - 인구 10만 이상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
- (경제운전 활성화) 경제운전(에코드라이브) 교육 및 홍보 활성화
 - 운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체험 교육 및 에코드라이브 경진대회 개최 등 홍보사업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지속가능성 조사·평가를 시행하여 주요도시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현황 및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 교통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
-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확대(14개→24개), 평가그룹 세분화(인구 10만 이상 시) 등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관리기준 개선(10.8)
-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평가를 위해 각 부분별 전문가가 해당분야를 평가하도록 평가단을 구성·운영* (10.21일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과제성격상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민간, 포털·통신사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대중교통정보센터와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*의 DB연계 추진

※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정보 수집은 우리부가 전담하고, 대민 이용자 서비스는 포털·통신사가 맡는 「민·관협력을 위한 MOU 체결(14.7월)」

-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기능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BIS간 정보교환 기술(광역BIS 기능)을 개발하고, 구축·운영비용 절감

□ 핵심성과

- (DB연계) 버스정보 연계기관 확대를 위해 7개 지자체 연계완료, 인터넷포털, 이동통신사의 대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
- (기능확대) “세종권(세종-대전-청주) 광역BIS 서비스*”를 개발하여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「정보교환 허브기능」 구현

* 광역BIS 서비스 : 대전시 버스정류장에서 세종시·청주시 버스의 도착정보와 실시간 버스위치정보가 확인 가능한 서비스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와 정보교환 기술이 다른 지자체 BIS센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수요응답형) 농어촌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 제고
- (시외버스 전산망)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·호환을 통한 왕복발권, 인터넷 예매 등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

□ 핵심성과

- (수요응답형)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중('14.11.17 규제심사 완료, 법제처 심사 중)
- (시외버스 전산망) 시외버스·터미널업체간 이해갈등 조정을 위해 개선명령, 간담회, 현장방문 등의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도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수요응답형)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시행('15.1.29) 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대책 마련 필요
- (시외버스 전산망) 시외버스·터미널측의 이해갈등으로 추진이 계획대비 지연되었으므로,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·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및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
- (저상버스) 일반 시내버스 → 저상버스로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(378억원)
- (특별교통수단)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국비 지원(55억원)

□ 핵심성과

-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지자체별 배분방침 결정(3.24)
-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에 '14년 저상버스·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계획 상정(3.28)
- 현재 CNG 또는 전기 저상버스 외에 디젤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표준모델기준 개정('14.10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,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로 보급 지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교통약자·사회적 기여자에게 신속·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·사회적 기여자 전용 출국장(Fast Track) 설치·개통
- 출국장 신설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·소요시간 단축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이용대상 재검토 등 제도개선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출국장 신설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업(법무부·관세청·안행부)으로 1단계 개통(10.18)
 - *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일정에 맞춘 개통 이후 12월말까지 장애인 등 2,500명 이용
- 서비스평가 결과, 출국소요시간 단축 및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상회
 - * (소요시간) 당초 6분 35초의 30% 단축 → 61% 단축, (만족도) 목표 80점 → 90.4점
-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(위원장:국토부제2차관) 심의 의결을 통해 전용 출국통로 이용대상자로 외국 장관급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완료(12.24)
- 1단계 개통 성과를 기반으로 행자부·기재부 협의를 거쳐 법무부·관세청 운영인력 확보 완료('14.12.30)를 통해 전면개통 기반 마련
 - * 전면개통은 법무부·관세청 신규 인력 총원·교육 시점에 맞춰 추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행자부가 출국장 신설에 따른 법무부·관세청 소요인력 배정을 '14.12.30 완료함에 따라 '15년 1~2월중 2단계 전면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주요내용) 항공기 이·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구간에서 송수신 기능을 제외하고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확대

□ 핵심성과

- 정부의 정책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(1.9)
-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 등을 담은 정부지침 마련 (2.3)
- 항공기 전자파 안전성 검증 및 항공사 운항규정 인가 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(3.1~)
- 안전 문제점 모니터링 및 탑승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(4~5월)
* (대상) 7개 국적항공사 탑승객 1,621명 (기간) '14.4.29~5.21
-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·평가(6.12) 및 대국민 홍보 (6.25)
- 기내 승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문결과의 항공사 제공 (6.30)
-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예절에 관한 공익광고 주제선정 의뢰 (7.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을 강화하고,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항공기내 승객간 갈등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재정-민자 연계 고속도로 이용시 중간영업소의 요금수납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변경, 중간정차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, 통행시간 단축, 연료비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
- 중간정차 최소화를 위해 도공과 민자법인 9개 노선간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(One Tolling System) 구축

□ 핵심성과

- 하이패스·영상 혼용 차로구성, 차로분리, 캐노피설치 등 현장설비 설치기준 마련(6.19)
- 구축비용 마련을 위한 민자법인별 편익산출 기준(교통량 추정, 인건비 증가율 등)에 대한 실무 합의(7.7)
- One-Tolling 비용·편익 분석 및 비용분담 방안 마련('14.10)
- 실시협약 체결 관련 사장단 회의 개최(12. 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기상악화 및 번호판 손상 등에 따른 통과 차량 번호 미·오인식 손실 보전 대책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운영 중인 철도역사에 철도이용객이 버스, 택시, 승용차, 자전거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광장을 조성
- 오산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주변 교통혼잡 및 철도환승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

□ 핵심성과

- 철도역 환승동선개선사업 추진
 - 1차 서류심사후 현지 합동조사*를 통한 사업대상지** 선정
 - 사업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합동회의 개최(6.25, 7.17)
- 오산역 광역환승센터 착공
 - 철도건설법에 의한 관계기관* 협의('13.12.14~'14.04.2) 및 승인(4.17)
 - 연내착공과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현장점검회의 개최(6.25, 9.30)
 - 오산시·한국철도시설공단간 위·수탁협약 체결(6.11) 및 착공(11.2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「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」의 광역철도 구간 사업활성화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이용자 맞춤형 철도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**학교 교과와 연계한 교육테마열차를 개발**
 - 열차 이동 중 열차 내 교육영상, 체험프로그램 등 교육컨텐츠를 제공하여 교육, 이벤트, 회의 등이 가능한 다목적 교육형 열차로 운행
 - 차량 개조,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및 열차 운행계획 수립 등 추진

□ 핵심성과

- 열차운영 방침 마련('14.3), 열차개조 및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('14.5), 열차운행계획 수립·확정('14.6) 등 **교육테마열차 운행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**
- 교육테마 열차의 개통식을 개최(7.2, 서울역)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조 유도
- '14.12.30일 기준 운행실적(예약포함)은 운행횟수 86회에 좌석공급량 29,584석(이용객 수 24,943명, 승차율 84%)으로 **'14년 목표치 달성**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열차 내 편의시설은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

【전략목표 VI】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.

◆ 성과목표 1.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 한다.

1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공공기관의 급격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, 방만경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
- (부채감축) 산하 부채중점관리 5개기관의 부채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'14년까지 16.2조원 감축 추진
- (방만경영 개선) 산하 23개 기관의 학자금 무상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항에 대하여 연내 개선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부채감축) 산하 부채중점관리 5개 기관의 부채증가액을 21.2조원 감축 달성(목표대비 131% 달성)
 - * 기관(감축액, 조원) LH 16.7, 수공 1.5, 도공 0.7, 철도공사 1.0, 철도공단 1.2 등
- (방만경영 개선) 학자금 무상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항(227 항목)에 대하여 산하 23개 기관 개선 완료
 - 1인당 복리후생비 15% 감축('13, 293→'14, 250만원, 43만원 ↓)
 - * 23개 기관에서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총 249억원 절감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LH는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며, 사업비 대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여 재무구조 악화

* '13년말 현재 자산 173.4조원, 부채 142.3조원(부채비율 458%), 금융부채 105.7조원이며, 연간 이자부담 4.5조원(하루 이자 123억원 수준)

- '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'('13.12)에 따라 '17년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 19.7조원 감축(162.9→143.2조원)을 위한 '부채감축계획' 수립('14.4, 공운위)

* 24개 방만경영 사항 개선을 위한 '방만경영 개선대책'도 수립·시행

□ 핵심성과

- (부채감축) LH 통합 이후 금년도에 최초로 부채 절대규모 감소*

* 총부채: ('13)142.3조→('14)136.6조(추정), 금융부채: ('13)105.7조→('14)98.7조(추정)

- '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' 중간평가 결과 양호기관으로 선정 (전체 7위, 국토부 산하기관 중 2위)

* 부채 중점기관(18개) 전체 감축액 24.3조원 중 LH 감축액 9.7조원(약 40%)

- (방만경영) 대형공기업 최초로 24개 개선 사항 모두 완료(8.20일)

- 지속적인 노조 설득, 우리부 지원 등을 통해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제외 등 첨예한 쟁점사항을 포함하여 노사합의 완료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수자원공사 정상화대책의 '14년 부채 감축 목표(8,065억원) 및 방만 경영 개선 과제(17개 과제) 달성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84만원 (18.7%) 감축
- 수공 재무상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공 4대강 투자비(8조원)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('14.7,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)

□ 핵심성과

- (부채 감축 대책) '14년 부채 감축 목표 8,065억원 중 11월 말까지 8,498억원 감축 달성
 - * '14년 목표 감축액 대비 105% 달성
- (방만경영 개선대책) 당초 총 17개 개선항목 중 상반기에 16개 과제 완료(5.21)
 - 상반기 미개선된 1개 과제(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) 완료(8.25)
 - 기재부 중간평가 실사과정에서 추가 발굴(9.11)된 10개 과제는 노조 및 직원 등의 소통강화 및 개선 필요성 설득으로 조기 완료(9.30)
- (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마련) 정부는 금년중 4대강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을 감안하여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4

도로공사 경영정상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 추진
 - (부채감축) 건설사업 구조조정, 경영효율화 등 감축 노력을 통해 '14년에 부채 2.02조원 감축
 - (방만경영 개선) 성과급 제도개선, 학자금지원 감축, 특별휴가 감축 등 총 29개* 과제 개선 추진

* 연초 정부과제 11건, 도공 자체과제 2건, 추가 정부과제 16건

□ 핵심성과

-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목표 조기 달성
 - (부채감축) 목표액 2.02조원을 초과한 2.06조원*을 10월까지 감축 완료
 - (방만경영) 연초에 목표로 제시한 13개 개선과제를 8월까지 개선 완료하고, 추가 개선과제 16건도 9월까지 개선 완료(총 29개* 과제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부채감축) '17년 부채규모를 '13년 대비 26% 감축(4.6조원 감축) 목표로 자산매각, 전사적 비용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추진
- (방만경영 개선) 퇴직금·의료비·교육비 과다지급 개선 등 13개 방만경영개선 과제를 '14년 9월말까지 완료

□ 핵심성과

- 철도공사는 철도청부터 지속되어 온 영업적자 구조를 40년만에 처음으로 영업흑자로 전환하여 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
- 철도공사는 당초 부채목표(15.3조원) 대비 0.1조원 추가 감축(15.2조원 전망)
- '13.12월 파업 및 '14.2월 파업 관련 징계,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악화된 노사관계 속에서도 방만경영개선 이행을 완료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부채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인천공항철도 회사의 지분 조속 매각 필요
- 국회 MRG 소위 및 철도소위('13.12~'14.4) 시 공항철도 지분매각 필요성 재검토 및 야권 등의 철도경쟁도입과 연계한 민영화 논란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국회, 언론 등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과다 및 방만경영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「공공기관 정상화 대책」 마련·추진
 - * 철도공단 설립('04.1) 이후 고속철도 건설비용 분담 등에 따라 부채 19.5조원('13년말)
- (부채감축) 사업비 절감, 경영효율화를 통해 '17년까지 1조 2,592억원 절감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('13년 중기재무계획 대비)
 -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'14년도 부채감축 목표 9,867억원을 성과지표로 설정
- (방만경영) 휴직제도, 통신비 지원 등 방만경영 요소(5개 과제) 개선 추진

□ 핵심성과

- (방만경영 개선) 개선과제(5건) 조치 완료(6.25)
 -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및 보수규정 개정 승인(6.25)
 - ① 업무상 질병휴직시 급여전액지급(3년) ⇨ 산재법 적용(70%)
 - ② 업무외 질병휴직시 기본급 지급(1년) ⇨ 공무원보수규정 적용
 - ③ 해산등 노조 신분변동시 노조 동의 ⇨ 협의로 변경
 - ④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별도운영 ⇨ 통합운영
 - ⑤ 통신비 지원(부장이상 등 412명) ⇨ 지원대상 50% 축소
- (부채감축) 11월말 목표 대비 **118.4% 달성**(실적 11,609억/목표 9,802억)

◆ 성과목표 2. 국토교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.

1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하도급자 등이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
-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강화(재판결과와 동일) 하여 원·하도급자간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
-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, 고질적 불공정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
- 상습 공사대금 체불업자* 명단 공표제도 도입으로 체불 피해 방지

□ 핵심성과

-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('14.5 건산법, '14.11 하위법령 개정)
-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계약 완료('14.6, 5건)
- 건설분쟁조정 효력을 강화(재판상 판결), 피신청인 참석 의무화 등의 개선('14.2)을 통해 건설업체간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
* (실적) '13년 3건 → '14년 29건 접수(조정전합의 4건, 조정1건, 중지12건, 조정중12건)
-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233건을 접수하여 221건을 조사 완료 하였으며, 특히 대금체불 33건(20억원)을 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“건설기능인등급제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(E-9) 관리 강화
 - 산업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자격·경력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“건설기능인등급제” 도입 추진
 - 공공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취업 근절을 통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및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간·오지 SOC현장의 인력난 해소

□ 핵심성과

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간·오지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(E-9) 쿼터 확대(14.1)
- 등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‘노사정추진전담반’ 구성·운영(14.5~)
- 2014년도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실태 점검 실시(반기별)
 - 내국인 보호 및 불법 외국인력 취업 근절을 위해 우리부 소속(5개) 및 산하기관(7개)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취업실태 점검 실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효과, 영향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 단계적 확대 시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건설ENG 분야에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요건(인력·자본금)을 완화(건기법 시행령 개정)하여 **종합ENG 활성화**를 위한 **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**
- 업역별로 구분된 건설기술자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,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**종합 역량등급제**로 개선
-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**해외건설 기술정보 DB**(해외건설 제도, 기준 등) **확충(750건) 및 시스템 고도화**

□ 핵심성과

- **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·시행**(‘14.5)
 -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**종합, 설계·사업관리, 품질검사**로 구분하고,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**경쟁을 활성화**할 수 있도록 **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**
 - 자격·경력·학력 등을 **종합평가**하고 그 결과(역량지수)에 따라 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단순 “자격”중심에서 “능력”중심의 기술자 평가 체계로 개편
- **해외건설기술정보 DB 확충**
 - DB확충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후,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**DB(751건) 확충**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턴키 담합·비리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마련
 - 턴키발주물량 및 시기조정, 턴키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최소화 등 대책마련('14.1,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)
- 턴키입찰공사의 발주물량 및 시기 조정
 - 발주청에서 국토부(중앙건설기술심의위)에 입찰방법* 심의요청 시 예정공사의 물량 및 시기의 적정성을 사전검토
-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도 적용 확대

□ 핵심성과

- 턴키 담합·비리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 방안 마련
 - * 「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」 마련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('14.1)
- 전국 발주청 및 업계를 대상으로 턴키 운영효율화 방안 교육 실시
- 기술제안 표준입찰안내서 및 평가매뉴얼 작성·배포
- 턴키입찰공사의 담합방지를 위하여 입찰방법 심의요청시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및 전국 발주기관 합의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건설ENG시장이 위축되고 입찰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수주 점유율이 업체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
 - 건설ENG 업체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되어 지원책 필요
- 건설ENG시장 적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업체의 입찰 참여 용역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'도급하한제' 방안 마련 및 도급 하한기준 기반 구축

□ 핵심성과

-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·홍보(3월)
-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전면시행(5.23)
- 건설기술용역 수주실적 집계·관리(5.23~)
 -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사별 공공부문 용역 수주실적 현황을 집계·관리 중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ENG 시장 구조체계(업체규모별 수주실적규모 등)를 파악한 후, 건설 ENG 특수성을 감안한 도급하한제 도입여부 검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가격, 공사수행능력,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**종합심사 낙찰제** 도입을 위한 **시범사업 추진**
 - *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덤핑낙찰, 공사품질 저하 야기
- 건전한 업체가 쉽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**등록기준 합리화**
 - 충분한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종합건설업체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및 실질자본금 기준 완화
-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상당기간 재등록 금지 추진 등 **부실업체 퇴출기능 강화**(3년내 2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시 5년간 재등록 금지)

□ 핵심성과

- **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**(‘14.1 중기청 고시 개정)
 - * ‘13년 건설업 지원 불가 → ‘14년 4개 업종 추가(산업플랜트, 조경, 폐기물, 방음)
- **종합심사제 가이드라인**(‘14.1)을 기초로 발주기관별 **시범사업 추진**
 - * 우리부 산하기관 18건 중 11.30 현재 15건 발주 완료, 나머지 3건은 12월 발주예정
- **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여 부실업체 퇴출기능 강화**(‘14.5 건산법 개정 완료)
- **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***에게 다른 업종 추가 등록시 1회에 한해 **자본금 등록기준의 50% 면제**(‘14.11 건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)
 - *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산법 위반으로 제재받지 않은 건설업자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, 수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- 지입해소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유도,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등

□ 핵심성과

-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한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, 수급조절위원회 구성·운영, 수급계획 수립 등
 - *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('14.7.29), 수급조절위원회 구성('14.9.3) 및 회의 개최(9.18,12.17,12.29, 3회),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('14.12.1)
- 불법 지입제 해소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유도 및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(여객법 하위법령 '14.11.22 개정 시행)
 - * 지입해소를 위한 개별사업권 검토 T/F 운영('13.11.27 구성) : 2회(7.10, 8.8.) 개최
 - ** 지입해소를 위한 지입차주와 간담회 및 면담 실시 : 6회(지입차주 5개단체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결과*('13.7), 현장 활용률 및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 및 보급 필요
- (우수사례 지원) 화주·물류기업의 상생거래 또는 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수여 등 시상
- (실태조사) 표준계약서에 대한 업계의 인식수준과 표준계약서 참고 및 적용현황 등 활용률*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- (홍보·보급지원) 표준계약서 활용, 상생거래가이드라인 활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설명회, 홍보 브로셔 배포 등을 통해 전파

□ 핵심성과

- 표준계약서 활용 우수사례 홍보설명회 개최
- 표준계약서 홍보 UCC 제작(9.30)
- 물류산업내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조사(11.27)
 - (활용률) 지난해* 10%에 못 미친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15%를 넘어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전파 → 성과관리 시행 계획상의 목표 달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

◆ 성과목표 3. 국토교통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.

1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○ '00년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체계를 그간 주택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체계로 개선

- 주택의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「역전현상」 해소, 주택보다 효율이 높은 주거용오피스텔 효율 조정 등

□ 핵심성과

○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,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(11.3)하고, 관련법령 개정 추진

- 주택효율은 조례개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(11.3), 주거용오피스텔 효율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

* (주택효율) 서울시 입법예고(11.17~12.7), 경기도 입법예고(12.12~12.31)

* (주거용오피스텔)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(11.7~12.17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(상생거래 가이드 라인 마련) 운송업체-화물차주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 거래관행을 구축하여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- (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)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 수출입 운송차질 및 국가 물류체계 마비 등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므로, 지속적인 상황관리 및 예방

□ 핵심성과

- 국토부-화물연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실무면담 실시로 집단운송거부 예방
 - 운송사업자 허가취소시 개별허가 부여 등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의
 ⇒ '14년에는 7.14(1일) 외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미발생
- 군위탁 컨테이너화물자동차 '15년 예산 확보(6억원)
- 운송업체-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선언('14.12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가 물류체계에 영향이 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지속적 노력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인천공항 경쟁력 유지 및 공항운영의 안정성·공공성을 제고를 위하여 아웃소싱 분야를 포함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 도출

□ 핵심성과

- 전문 컨설팅사 용역('14.5~9)을 바탕으로 핵심업무 및 국민안전 직결 업무는 직고용·자회사 추진 등 인력구조 개편 방안 마련('14.12)
 - 수하물·전기시설·통신 네트워크 감시 및 제어, 대테러 보안 상황통제 등 공항 핵심분야의 직고용, 안전분야(소방, 폭발물처리)의 자회사 설립
 - 아웃소싱분야 중 전문성 등이 높은 분야(보안검색장비 유지관리, 수하물 시설 운영·유지관리)는 아웃소싱 유지하되 장기파트너쉽(10년 계약)도입 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조직의 유연성과 공항의 핵심역량 강화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력구조 개선 추진

◆ 성과목표 4. 국민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.

1 능동적인 홍보시스템 구축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홍보기획팀을 신설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
 - 주요정책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들과의 “홍보협의회”를 정례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(One-Voice) 도모
 - 홍보 전문가를 초빙하여 홍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소통 방향에 대한 “홍보 전문가 자문회의” 개최(10월)

□ 핵심성과

- 홍보기획팀 신설(2.6), 매주 중요과제를 선정하여 주간홍보 사전 기획회의 개최, 장관주재 ‘실국장 전략홍보회의’ 격주 개최
- 실국별 ‘중점홍보과제 및 갈등예상 과제’를 사전에 발굴(62개)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과제별 홍보계획 수립(4.30)
- 산하기관 홍보협의회(10회), 소속기관 홍보협의회(2회), 유관기관 홍보협의회(1회) 등을 개최하여 홍보협력 강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주택, 교통, 국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온라인 관심도가 높은 이슈 수시로 발생
- 우리부 정책과 정보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제공

□ 핵심성과

- 규제개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SNS 홍보를 실시하여 42개 정부기관 중 클라우드 지수* 평가에서 1위, SNS 정책고객수 및 블로그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

* 클라우드 지수: 미국의 SNS 영향력 평가업체 클라우드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영향력 수치

* SNS 정책고객수 36.1% 증가('13, 72천명→ '14, 98천명)

-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앞서 SNS를 활용한 장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신뢰감 조성
-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SNS, 홈페이지, 블로그에 집중 노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온라인홍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므로, 지속적으로 발전방향 모색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우리부는 주택·도시·건설·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원이 많고, 집단민원 또는 고질·악성민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

□ 핵심성과

- 콜백시스템 도입, 전문상담을 향상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
 - 금년 4월부터 도입한 콜백시스템은 시행 후 11,332건의 민원을 직접 전화하여 상담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
 - 민원 전문교육 등 역량강화 노력으로 전문상담율의 지속적 향상 (6월까지 87.4% → 11월까지 90.7%)
- 불만민원 해소를 위해 전화친절도를 점검(6.20)하고, 악성 전화 폭언에 대한 응대요령을 배포(4.4)하여 민원처리자의 고충도 해소
- 민원집중 부서(12개)를 중심으로 T/F를 구성·운영(3.19, 7.25, 10.12, 12.29)하여 민원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내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'고객관리' 항목을 조정하여 민원 만족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잘못된 관행을 발굴·개선하고, 「반부패 청렴대책」 추진을 통한 청렴도 우수부처로 재도약
- 권익위원회 주관 ‘기관청렴도 평가’ 상위권 진입, ‘관행개선위원회’ 설치·운영 및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* 추진

* 찾아가는 청렴교육, 청렴컨설팅,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

□ 주요성과

-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‘관행개선위원회’를 설치(‘14.3.)하고, 우리부 스스로 과거의 비정상적 관행을 적극 발굴·개선
-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(‘14.4.~7.), 부패척결 결의대회(‘14.9.), 청렴 컨설팅(‘14.5.) 등을 통해 직원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추진
- 부패 취약시기, 취약분야(공사관리, 현장점검 등),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 문책
- 자체감사 시 예산 누수, 부당지출 등 부조리 취약분야(국고보조금, 민간단체 위탁·대행사업비)를 집중 점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행적·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부내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포털·EA 등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·지원 및 PC영상회의 활성화, 정보화교육을 통한 지식역량 강화
- 해킹 등 치명적인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토교통 정보자원 보호

□ 주요성과

- '14년도 정보지식인대회* 운영(2차에 걸쳐 총 319명 참여, 4명선발) 및 정보화역량진단**(행자부) 참여로 스마트 맞춤형 정보화 교육 내실 강화
- 2014년도 정보화통합관리체계(EA)* 경진대회 참여하여, 우리 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('국토교통부 통합 정보화 관리방안' 발표)
-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
 - (24시간 보안관제) 우리부 및 산하기관의 PC·정보시스템(37개 기관, 653개 시스템)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, 비인가 접근 등 보안관제
 - (점검 강화) 취약점 점검항목을 확대하고, 점검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제 확대 및 모의해킹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('14.2~12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공통행정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필요

◆ 성과목표 5.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을 높혀 나간다.

1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성취도 높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능력 있고 사기 높은 직원을 양성
 - 특별승진 제도 내부규정화, 보직경로관리 제도 도입, 향피제도* 전면 보완, BSC를 활용한 승진·전보 등 실시
- * 소속기관 장기 근무 6급이하 직원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순환전보, “선순환 인사교류”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하 “선순환 인사교류”로 표기

□ 핵심성과

- 7급 → 6급 → 5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상시화하여 업무실적이 승진과 지속적으로 연계된다는 인식 확산 유도
- 개별 중요직위에 대한 보직경로관리와 상반기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직위유형 보직관리 제도를 연계
- 선순환인사교류 전면 보완 및 관련 전보인사 실시
 - 지역, 시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, 시기(연간 2회, 4월 및 10월)와 선정기준(현 소속기관 10년 이상, 6급에서 7년 이상)을 명확히 함
- * 1년 이상된 미복귀자 전원 복귀 조치 및 수차례의 의견 수렴 후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(하반기 10명, 복귀 7명, 1년 연기 1명)
- BSC 성과평가 점수를 승진 심사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주의 인사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과제평가를 연 3회로 나눠서 진행하고 매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*을 통해 합리적인 과제평가 실시
- 핵심과제 중점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실시
- 주요과제에 대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환류

□ 핵심성과

- 평가체계 일원화와 평가기준 단순화로 실국 업무부담을 경감
 - '13년 별도로 시행되었던 CEO과제평가를 자체평가에 포함시키고 평가항목 및 지표도 축소(4항목, 9개 지표 → 3항목, 5개 지표)
- 기존 부내 토론회의 역할과 과제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점검회의를 강화
 - 국민불편 사항, 갈등요소가 잠재된 과제는 현안발생 즉시 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점검회의를 개선(38회 개최)
- 현장밀접형 과제에 대해 단순 현장방문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토론회, 실국워크숍을 병행 실시하여 주말현장방문 효과를 제고
 - * 장관님 주말 현장방문 41회 실시(워크숍 등 병행실시 14회)
-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('14.11.~12.)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만족 사항,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'15년 정책수립에 반영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정책·사업을 갈등잠재과제로 발굴·지정하여 사전 갈등영향검토,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예방체계 구축
- 갈등진행 또는 이슈화 예상과제에 대해서는 갈등·홍보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갈등 관리
- LH, 수자원공사, 도로공사, 철도공단 등 갈등이 빈번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처 수준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갈등관리 강화

□ 핵심성과

- 갈등 예상 정책·사업의 조기 발굴 및 사전 갈등영향분석 등 선제적 갈등예방체계 구축
 - 국조실 선정과제 16개 이외에도 우리 부 자체적으로 21개 갈등과제를 발굴하여 사전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갈등 예방
-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확대 및 분야별 위원회 신설, 과제별 갈등전문가 지정 등을 통해 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(16건)
- 갈등관리 교육, 워크숍, 갈등 DB 구축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과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적정예산 확보를 위해 단계별 예산편성 절차 수행과 실국, 기획재정부, 국회 등 대·내외 대응
- 예산 집행실적 점검(분기별 1회 이상)으로 집행상황 점검·독려를 통해 정책 수혜자(국민)의 정책체감도 제고

□ 핵심성과

- '15년도 예산 요구(안) 제출(6.13)
 -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반영,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성과 가시화,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투자효율화 방향으로 예산 편성
- '15년도 예산안 국회확정(12.2)
 - 도로, 철도 등 SOC를 중심으로 3,542억원이 증액되었으나, 주거급여(10,756억원)가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안 22.7조원 대비 7,214억원 감액된 22.0조원으로 확정
- '14년도 재정집행 달성('14.11월말기준)
 - 11월말 현재, 예산 및 기금에 대해 33.6조원(90.을 집행하여, 목표(33.6조원) 초과달성(100.9%)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타 국가·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건설, 수자원 관리, 고속 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
 - * 해외건설은 '14년 700억불 수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국에 수자원 관리 기술 수출, 고속 철도 해외 진출 등도 추진 중
- 양자·다자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분야 기술·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요청
- FTA 협상을 통해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토·교통 분야별 선제적·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(한-중-일 FTA, 한-태국 FTA)

□ 핵심성과

- 정상회담, 외빈면담, 국제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, 인프라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우리 업계의 수주를 적극 지원
 - * '14년 정상회담 14건, 공동위원회 7건, 외빈면담 14건, 국제기구 대응 9건 등의 실적(총 44건)을 달성하여 목표치(35건)보다 초과 달성
- 한-중-일/한-태국 FTA 협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, 향후 국토교통 분야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 선제적·적극적으로 대응 가능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

(1) 평가결과

□ 과제 주요내용

- 계속되는 북한의 침투·도발 위협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총무 계획을 수립·보완하고,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국가 총동원태세를 확립하여 비상시 정부대응능력을 강화
- 새정부 국정과제인 ‘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

□ 핵심성과

- 2014년도 총무4700 국토교통집행계획 수립
 - 1차(3.27)·2차(4.17) 소요심의 실시(3.27): 민·관·군동원소요 심의·확정
 - * ‘15년 동원 자원 확정: 장비(175,3999대), 건물·토지(108,716천㎡), 업체(2,410개)
- 전시대비 동원자원조사 실시(2회, 4.15, 6.17)
- ‘환경 및 기상이변 관련 재난대응강화 방안(VIP지시)’을 마련(3.21) 하고 추진실적을 국토교통재난시스템에 등록·관리
- 「2014 안전한국훈련」 중앙부처 1위(대통령 기관표창) 선정(11.6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 필요
 - 동원자원 조사 및 중점관리지정에 대한 거부, 비협조 방지를 위해 평시 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